

# 메아리

문창재 수석 논설위원



'대도'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조세형씨가 수감생활중 온몸을 던져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암상의 변호사가 그와의 면담을 근거로 98년 시사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보면, 청송교도소 재소자 시절 조세형은 박영두라는 재소자가 아무 잘못 없이 교도관들에게 맞아 죽은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팔주까지 벌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변호사 이름으로 고발되었지만, 세상은 그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 성공적으로 은폐됐던 의문사

필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범죄자의 말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 글의 주인공인 조세형 석방 여부가 달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세속의 관심이 집중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진상은 엉뚱하게 밝혀졌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박영두의 사인이 교도관들의 집단폭행이었다는 사실이 지난 주 보

도되었다. 영종하다는 것은 살인자들과 그 조직원들의 조직적인 은폐공작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목격한 교도관이 암상의 기록을 못 이겨 17년 만에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 제보를 했다는 점이다. 성공적으로 은폐했다고 믿

# 그 죽음 앞에 몇몇한 사람은

있던 일도 그렇게 폭로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다.

〈저 새끼들이 박영두 얼굴에 타원을 뒤집어 씌우고 개 잡듯이 몽둥이로 두들겨 뺐어. 박영두가 세번이나 기절을 했는데도 찬물을 끼얹어 가면서 때고 또 때고... 한 쪽에 나를 붙잡아 세워놓고... 나더러 똑똑히 보라 이거지, 나쁜 00들...〉 암 변호사 글에 나오는 목격자의 울부짖음이다. 84년 10월 13일의 일이다. 청송교도소의 한 발생구렁이 재소자는 교도관들이 자신을 겹주기 위

해 비교적 양순한 동료들 불러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온 감방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울었다. 그렇게 얻어맞은 박영두는 조세형의 열방에 던져졌다. 처절하게 어머니를 부르며 달려달라고 애원하는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박영두가 죽어간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교도관은 엄살이라면서 들은 척도 없었다.

## 교도관 17년만의 제보

다음 날 새벽 피멍과 말라붙은 피로 얼룩진 박영두의 시체가 교도관들에게 들려 나가는 장면이 조세형에게 목격되었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한 유일한 이유였다. 검찰 지휘로 의사의 검안과 부검결과까지 거쳤다면 그의 시체는, 99년 유족이 이장할 때 관을 열어보니 양팔을 신은 채 옆으로 누운 상태였다.

## 기사 한줄 안냈던 언론

조사결과 그 때 박영두를 때려 죽인 살인자 무리의 주동자는 그 뒤 암으로 죽었고, 한 사람은 과테말라로 이민을 갔다. 몇 사람은 퇴직했고, 한 사람은 아직 재직중이다. 이만자는 현지 대사를 통한 서면조사에서 폭행혐의를 부인했고, 퇴직자 한 사람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은 사실까지는 시인했다. 교도소장 검안 의사 등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암상의 변호사가 조세형 변론과정에서 알게 된 이 사건을 문제 삼으려 했을 때 검찰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의 압력이 대단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는 검찰의 으름장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학교 선배인 한 고위관리는 "1만 2,000명 교도관의 명예를 위해 덮어 달라"고 부탁했다. 언론도 사실을 부인하는 법무부 측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쓰지 않았다. 아무 죄 없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청송교도소까지 넘어간 이름 없는 재소자의 기막힌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cjmoon@hk.co.kr

# 의문사, 민주화운동 첫 판정

## 84년 교도소폭력 항의 사망 박영두씨 타살 인정

감호소 생활중에 부당한 인권탄압에 항의하다 숨졌다면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청송감호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영두(사망 당시 29세·사진)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박씨가 감호소내 부당한 인권탄압에 항의하다 고문받고 숨진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리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박씨의 죽음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의문사 83건에 대해 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타살혐의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박씨 사건을 곧 민주화보상심사위원회 회부, 심의를 통해 보상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박씨가 사망한 뒤 감호소내에서 당시 조직적인 사건은 폐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조

사 결과 박씨는 84년 10월 12일 사망 직전 치료를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해 지하 고문실로 옮겨졌으며 양팔을 뒤로 해 온몸을 묶는 속칭 비너꽃기를 한 채 2시간가량 고정봉 등으로 마구 맞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3-4차례 의식을 잃었으나 그때마다 교도관들은 머리에 두건을 씌운 채 물을 끼얹으며 구타를 계속해 결국 박씨를 숨지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박씨가 숨지자 당시 교도소 관계자들이 당일 오전 6시쯤부터



간급회의를 열고 사건 관계 직원들이 입을 맞춘 뒤 경위서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기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망후 2-3일 뒤 청송교도소 의무과에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채 담당 검사의 지휘로 부검이 실시돼 심장마비로 사인이 규정됐으며 15일 유족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매장됐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kr

# “의문사 박영두씨 교도관에 폭행사망”

## 규명위, 4건 조사 발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4년 청송교도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영두씨(당시 28세)가 감호소내 부당한 인권탄압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며 “박씨의 죽음이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부당한 죽음으로 민주화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해 민주화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박씨에 대한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조사 중인 83건의 의문사 사건 중 민주화와 관련해 타살혐의가 공식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비록 재소자라 하더라도 재소자의 권리를 무시한 교도당국의 불법조치에 대해 개선을 요구

하는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소극적 행위도 '권위주의 통치에 항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민주화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84년 10월12일 사망 직전 치료를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해 지하고문실로 옮겨져 양팔을 뒤로 해 온몸을 묶는 속칭 비너꽃기를 한 채 2시간 가량 고정봉 등으로 마구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교도소 관계자들은 당일 오전 6시쯤부터 간급회의를 열고 경위서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77년 숨진 김제강씨는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돼 기각했으며 82년 사망한 건국대생 신영수씨는 단순사고사로 판명됐다고 공식발표했다. 강영수기자

### 청송교도소 고문死 박영두씨 '민주화 운동' 인정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다 교도관들의 고문으로 숨진 희생자가 정부 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민주화운동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奎)는 25일 "1984년 청송 제1보호감호소(현 청송교도소)에서 사망한 박영두(朴榮斗·당시 29세·사진)씨는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다가 교도관들의 집단 고문에 의해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다(본지 6월 9일자 25면).

## “사람 대접” 요구하자 밀실 폭행·갖은 고문

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조만간 대통령 직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차씨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영두 사건—차씨는 형이 운영하는 체육사 일을 돕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는 25세 때인 80년 여름 고향인 경남 통영 비진도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갔다가 비운의 인생을 맞게 된다.

그곳에서 계엄군에 의해 불량배로 간주돼 뚜렷한 이유없이 경남 창원외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던 것.

'삼청교육대'란 80년 5월 전두환(全斗煥)씨에 의해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가 폭력범과 풍토문란 사범 등을 소탕한다며 군 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차씨는 81년 1월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감호 2년을 선고 받고 강원도 화천의 육군감호소로 이송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육군감호소 재소자들은 옷을 벗고 깨진 유리 위에서 포박을 하거나 아전삼으로 매를

#### 박영두씨 연행·수감·사망 과정

- 1980년 여름: 경남 통영 비진도 해수욕장에서 휴가중 불량배로 간주돼 당시 신군부가 만든 청원 삼청교육대로 연행 (당시 25세, 가계일을 돕는 평범한 시민이었음)
- 81년 1월: 재판없이 보호감호 2년 선고 받고 강원도 화천 육군 감호소로 이송
- 12월: 집단농동 선동혐의로 군사재판에서 15년형 선고, 청송 감호소로 이송
- 84년 10월 13일: 청송 감호소 지하 조사실에서 교도관에 집단타당해 사망

#### 휴가중 삼청교육대로

#### 정식재판 요구에 15년형

맞는 등 잔혹한 구타에 시달렸다.

차씨는 그곳에서 재소자들을 대표해 '정식 재판을 받게 해달라' '구타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다가 집단농동 선동 혐의로 그해 12월 군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로 옮겨졌다.

차씨는 84년 10월 12일 오후 "몸이 아프다"며 의무과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다 지하조사실로 끌려가 교도

관 7~8명에게 집단 가혹행위를 당했다가 다음날 새벽 자신의 목방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그는 숨지기 직전까지 재소자들과 함께 '전두환 정권 퇴진' '보호감호 철폐' 등을 요구했으며 교도소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의무과에 옮겨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당시 수감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몸이 묶인 채 양팔을 고개 뒤로 젖히고, 양 팔꿈치가 서로 불도록 묶인 다음 목과 팔꿈치 사이에 끼운 각목을 비트는 이른바 '비너꽃기' 등 다양하고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

◇조직적 은폐—당시 교도소측은 의성지청에 보낸 보고서에 '차씨가 조사실에서 머리를 수회 벽에 부딪치며 조사에 불응했다'고 쓰는 등 차씨의 타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가해 교도관 4명과 사건을 은폐한 교도소장·보안과장 등 6명에 대해 공소 시효(10년)가 지나 고발은 하지 않는 대신 실명을 공표했다. 성시운 기자

<copipi@joongang.co.kr>

### 박영두씨 사건 확인되기까지...

## 목숨 건 진상 알리기 번번이 공권력에 꺾여

25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박영두씨 사건은 '권위주의 시절의 비참했던 인권 현실'이라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도소 내 동료 재소자들은 차씨의 타살 이후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치열한 시도를 몇차례 했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차씨 사망 1년 뒤인 1985년 9월 차씨와 같은 건물에 수감돼 있었던 동료

재소자들은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교도관 8명을 인질로 잡고 "박영두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하며 집단농동을 벌이기도 했다.

동료 재소자 여섯명은 이후 88년 3, 4월 두차례 더 집단행동을 벌였다가 안동교도소로 이감되면서 '민간 병원으로 나가는 게 최선의 폭로 방법'이라고 생각해 길이 15cm의 칫솔을 삼키기도 했다.

이중 한명이 차씨 사건의 개요와 교도소 실상을 적은 종이쪽지를 항문에 숨기고 안동의료원으로 나가 이 쪽지를 병원 화장실에

남긴 게 계기가 돼 당시 야당인 평화민주당이 조사에 나섰으나 진상을 밝히지는 못했다.

이들은 교도소 내 집단행동 때문에 같은해 7월 안동지청 검사에게 조사받게 되면서 차씨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2년여에 걸친 수사에서 검찰은 차씨의 사망 직전 함께 고문당한 재소자 안모(45)씨를 조사하지 않은 채 교도관들을 무

혐의 처리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교도관

#### 양심가책 교도관 제보

#### 17년만에 진실 알려져

이 제보해 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차씨를 민주화 공로자로 인정할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그의 행동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결론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교도소 내 인권침해에 항의한 인권운동으로 평가한 것이다.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부당한 죽음이라는 점도 평가에 포함됐다.

성시운 기자

<copipi@joongang.co.kr>

# '의문사' 첫 타살인정

### 청송감호소 수감 박영두씨 '84년 교도관 폭행치사' 결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청송감호소에서 의문사한 박영두씨(당시 29세·사진)는 교도관들의 폭행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25일 발표했다. 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 중 타살로 공식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박씨는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경북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인 84년 10월 13일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다음날 숨진 것으로 드러났



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감호소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갖고 경위서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 은폐 기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박씨를 폭행한 교도관 4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98년 12월 대도(大盜) 조세형씨가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씨가 교도관의 집단구타

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폭로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92년 박씨 동료들의 재정신청으로 이 사건의 재조사를 담당할 10명의 검사와 98년 조씨의 폭력에 대해 '단순 심장마비사'라고 확인한 법무부는 최소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원회는 또 박씨의 죽음이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죽음이고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을 심의해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 '의문사' 타살 첫 인정

### 청송교도소 박영두씨 교도관폭행으로 숨져 민주화운동 보상심의 요청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84년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의문사한 박영두씨(당시 29세)가 교도관들의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25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박씨가 공권력의 부당

한 행사로 숨진 데다 5공 정권에서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항의한 점 등이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위원회가 조사중인 의문사 사건 중 타살 혐의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80년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뒤 집단행동 및 폭력사태 등에 연루돼 10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84년 10월 12

일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다음날 숨졌다. 그러나 위원회는 박씨를 폭행한 교도관 4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은 하지 않고 이름만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77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가혹행위에 의해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제강씨(당시 52세) 사건의 경우 김씨가 병사한 것으로 판명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 '의문사' 조사권 대폭 강화하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된 지 8개월여 만에 첫 성과가 나왔다. 지난 84년 청송감호소에서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박영두씨가 실은 교도관들의 고문으로 타살됐다고 판정한 것이다. 교도소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박씨의 사망경위를 조작·은폐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씨는 신군부가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던 80년대 초, 뚜렷한 죄 없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다시 청송감호소에 넘겨졌다. 박씨는 "몸이 아프니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야만적 살인행위로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나 검찰도 진실을 외면했고 그 뒤 수차례의 사망원인 재조사도 소용없었으며 법원 역시 92년 관련 교도관들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비단 박씨뿐이겠는가. 그밖의 조사대상인 82건의 의문사 대부분이 죄가 없거나, 또는 부당한 권력에 항거했다는 죄가 원인이라는 심증을 받고 있다.

의문사 규명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한

편,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고 반인륜적 범죄를 차단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인간답고 정의롭기를 바란다면 과욕일 것이다. 뒤늦게나마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의문사의 상징인 장준하 선생과 최종길 교수도 타살 혐의가 짙다고 보고했지만 대부분의 의문사 조사는 진전이 없다. 기본적으로 현장과 기록이 없고, 목격자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관계기관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사관에게 강제수사권이 없고 시한도 너무 짧다. 의문사 접수 후 6개월 안에 1차 조사를 마쳐야 하고 필요할 경우 3개월을 연장토록 돼 있으니 위원회의 활동시한은 다 돼가고 있는 셈이다.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강제수사권을 부여하고 조사기간도 사실상 무기한으로 늘려야 한다. 또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상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관련자는 사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만하다.

## 교도소 의문사 박영두씨 민주화관련 '타살' 결론

### 폭행 교도관등 고발않기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25일 청송교도소에서 1984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영두(당시 29살)씨 사건(〈한겨레〉 5월 19면)에 대한 조사 결과 박씨가 교도소 내의 부당한 인권탄압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씨의 죽음은 권위

주의 시대 재소자의 인권보호 등 민주화와 관련이 있음이 인정됐다"며 "박씨 사건을 끝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넘겨 박씨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여 민주화와 관련해 타살 혐의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박씨가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관련자들이 부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을 심장마비로 기재

하고 유족도 입회시키지 않은 채 가매장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기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박씨를 폭행한 이장술·박수호·김의식·김명경씨 등 교도관 4명과 당시 지휘체계에 있던 김명식 교도소장과 서장권 보안과장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하지 않는 대신 이름을 공표해 도덕적 책임을 묻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진정 및 직권으로 조사해온 의문사 83건 가운데 지난 77년 숨진 김제강(당시 52살)씨 사건은 공권력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명돼 기각하는 등 2건을 기각했으며, 1건은 진정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 의문사 타살혐의 첫 인정

청송교도소 박영두씨  
교도관 폭행 사망 확인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위원  
장 양승규)는  
지난 84년 청송  
교도소에서 복  
역 중 의문의

죽임을 당한 박영두(당시29세·사진  
씨)가 당시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인  
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발  
표했다. 위원회가 조사 중인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 중 타살 혐의가 인  
정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씨는 폭력 전과와 '불량배 혐의자'  
로 5공 치하 계엄군에 연행된 뒤 경  
북 청송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하던  
중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교  
도관들로부터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를 당해 84년 10월13일 숨졌다.

위원회는 박씨의 죽음이 권위주  
의 시대 재소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  
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던 점  
을 인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박씨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방안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  
고 했다.

박씨를 직접 폭행한 교도관 4명과  
당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교  
도소장, 보안과장 등 6명에 대해서  
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고발하지  
않는 대신 명단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날 이 같은 조사결과를 김대중 대통  
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로써 위원회는 조사 중인 의문  
사 83건 가운데 1건은 민주화 운동  
과 관련된 타살로 인정하고 2건은  
기각, 1건은 진정을 취하하는 등 모  
두 4건을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崔有植기자 finder@chosun.com

# 의문사 첫 타살 규명

박영두씨 고문-가혹행위로 사망 확인

## 진상규명위 발표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  
회가 지난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영두(당시  
29세)씨가 타살에 의해 숨진 사실  
을 처음으로 밝혀내는 등 의문사  
진상규명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  
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과 김두황씨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놓고 있어 각종 의  
문사의 진상이 속속 드러날 것으  
로 보인다. 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씨가 교도관들  
의 폭행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밝  
혀졌다고 발표하면서 교도관들이  
박씨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할  
때 사용한 도구들을 전시하고 당  
시 상황을 설명했다.

/황진영기자 buddy@sgt.co.kr  
의문사▶2면에 계속

## 의문사

▶1면서 계속

위원회가 본격 조사를 벌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타살혐  
의를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조사결과 박씨는 삼청교육  
대에 끌려간 뒤 경북 청송교  
도소에 수감중이던 1984년 10  
월13일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해 지  
하고문살로 옮겨져 양팔을 위  
로 해 온몸을 묶는 속칭 비녀  
꽂기를 한 채 2시간 가량 교  
정봉 등으로 맞아 숨진 것으  
로 밝혀졌다. 또 당시 교도소  
관계자들은 당일 오전 6시쯤  
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경위서  
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  
다.

위원회는 박씨의 죽음이 공  
권력 개입에 의한 부당한 죽  
음이자 권위주의시대 재소자  
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의하는  
등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박  
씨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과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요  
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75년  
민주화운동을 하다 경기도 포  
천군 약시봉에서 등산 중 의

문의 죽음을 당한 장준하(사  
고 당시 64세·사상계 발행인)  
선생 사건에 대해 타살 의혹  
이 짙다는 점을 밝혀냈다. 위  
원회가 지난 7일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시신발견 지점으  
로 알려졌던 곳의 지형적 여  
건을 볼 때 실족사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입증하자 당시  
유일한 목격자였던 김모(67)  
씨가 "시신 발견 지점이 알려  
진 것과 다른 것 같다"는 당  
초의 본인 주장을 뒤집는 진  
술을 받아내는 등 타살 가능  
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83년 학생운동 참가  
자로 강제징집된 뒤 군복무중  
사망, 자살로 처리된 고려대  
생 김두황(당시 23세)씨 사건  
조사에서 당시 군 수사당국이  
김씨의 것이라고 발표한 유서  
의 필적이 김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의문사 진  
정건중 지난 77년 당시 중앙  
정보부에 끌려갔다는 뒤 숨졌  
다는 김재강(당시 52세)씨는  
심장마비로 병사하는등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월 출범한 위  
원회는 진정 및 직권으로 조  
사중인 의문사 83건중 1건은  
민주화관련타살로 인정하고 2  
건은 기각, 1건은 진정취하하  
는 등 4건을 종결처리했다.

# 의문사 민주화관련 타살 첫 인정

## 진상위 "박영두씨 교도관 집단구타로 사망"

## 84년 당시 폭력 교도소장등 6명 실명 공개

5공 당시 발생한 의문사가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 타살로 인정됐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25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4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숨진 박영두씨(당시 29세) 사건을 조사한 결과 박씨가 교도관들의 집단 구타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박씨가 재소자 인권 보호에 힘쓰는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 명예 회복 및 보상조

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박씨와 유가족에 대해 명예 회복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당시 청송감호소 관계자들이 말을 맞춘 뒤 경위서를 조작하고 유족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박씨를 가매장했다"면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교도관들이 박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고문 도구들도 함께 제시했다.

위원회는 박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교도관 4명과 교도소장, 보안과장 등 6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로 고발하지 않는 대신 실명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또 의문사 진정내용 중 지난 77년 숨진 김제강씨(당시 52세)는 심장마비로 병사해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정 및 직권으로 조사 중인 의문사 83건 중 1건은 의문사로 인정되고 2건은 기각, 1건은 진정 취하되는 등 4건이 종결 처리됐다.

●박록삼기자 youngtan@kdaily.com

# 교도소 의문사 박영두씨 민주화관련 '타살' 결론

## 폭행 교도관등 고발않기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25일 청송교도소에서 1984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영두(당시 29살)씨 사건(〈한겨레〉 5월 19면)에 대한 조사 결과 박씨가 교도소 내의 부당한 인권탄압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씨의 죽음은 권위주의 시대 재소자의 인권보호 등 민주화와 관련이 있음이 인정됐다"며 "박씨 사건을 곧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넘겨 박씨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여 민주화와 관련해 타살 혐의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박씨가 고문으로 사망하자 사건 관련자들이 부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을 심장마비로 기재하고 유족도 입회시키지 않은 채 가매장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기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박씨를 폭행한 이잠술·박수호·김의식·김명겸씨 등 교도관 4명과 당시 지휘체계에 있던 김명식 교도소장과 서장권 보안과장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하지 않는 대신 이름을 공표해 도덕적 책임을 묻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진정 및 직권으로 조

사해온 의문사 83건 가운데 지난 77년 숨진 김제강(당시 52살)씨 사건은 공권력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명돼 기각하는 등 2건을 기각했으며, 1건은 진정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 박영두씨 84년 교도관 폭행으로 사망 의문사...타살 첫 확인

### 진상규명위, 가해자들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능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조사중인 의문사 가운데 민주화와 관련, 타살로 확인된 조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관련기사 13면

그러나 당시 가해자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10년)가 지난 관계로 검찰 고발을 통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과 관련,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진상규명위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4년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의문사한 박영두(당시 29세) 씨 사건은 당시 발표했던 사망마비가 아닌 교도관들의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진상규명위는 "박씨의 죽음에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부당한

죽음이고 권위주의 시대 재소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응징하는 등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 박씨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을 심의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박씨는 81년 일어난 삼척교도대 집단노동주동자로 지목돼 군사재판에서 10년형을 받고 복역중이던 84년 10월 13일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해 지하실로 끌려가 못대를 받고 지하 정벌방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신음하다 14일 새벽 숨진 채로 발견됐다.

특히 교도소측은 박씨 신음을 듣고 도움을 요청한 동료 재소자의 요구를 묵살했으며 박씨 사망 직후 목격자들을 흠박하고 경위서

를 조작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경북민주당 조사단이 88년 조사활동을 벌였고 국회 국정감사 및 재정신청에 따른 수사가 92년까지 진행됐지만 가해자들의 사실관계, 위증 등으로 박씨 사건의 타살혐의를 찾지 못했다.

김형태(45·변호사) 진상규명위 제1상임위원은 "가해자 가운데 현직공무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에서는 박씨를 고문치사한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토록 국가에 법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w.com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84년 청송교도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영두씨의 사망원인을 발표한 후 노루뿔과 획수갑 등 박씨의 몸을 묶었던 증거물들을 공개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jinlee@labow.com

# 비너꽃기 통닭구이 집단폭행 조직적 은폐...그러나 공소시효 지나면 별수 없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박영두씨 고문치사 사망은 진상조사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박씨는 재소자에 대한 인간이하의 취급에 저항하다 교도관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현행 법으로는 가해자 처벌근거가 없다.

이에따라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승보다 못한 재소자="지프차로 감호생을 매달고 달리는 것을 보았고 연병장에 유리병을 깨뜨린 후 옷을 벗긴 상태로 포복을 시켰습니다." 지난 80년대 군부독재에 의해 생긴 삼척교도대에서는 구타, 가혹행위 등이 이처럼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숨졌다.

특히 교도관들은 손과 팔을 묶은 채 비너꽃기, 통닭구이 등 고문을 자행했으며 교정봉, 군화 등으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지시했으며 서장관 보안과장파 서근수 의무과장은 박씨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 교도소장 김명식에게 보고했다.

교도소측은 박씨가 숨진 14일 오후 박씨 가족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신을 교도소 내 공동묘지에 가매장했다. 특히 박씨와 함께 구타를 당한 안모

가해자 중 2명이 현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경 당시 교도사는 청송교도소에 현직 교도관으로 근무중이며 김의식 교도사는 법원 김천지원에 재직중이라는 것.

특히 진상규명위는 김의식 교도의 경우,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 기간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범죄가담자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박씨 사건의 가해자가, 현직 공무원으로 밝혀졌음에도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w.com

## 박영두씨 고문치사, 범인 알아도 처벌근거 없어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망당시 박씨는 변기에 얼굴을 댄채 뱀이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으며 눈동자는 흰자 뿐이었고 상반신 전체가 시커멓게 변해 있는 상태였다.

◇고문치사 조직적 은폐=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박씨 사망후 최복성 검사는 "타살혐의가 없으므로 사체를 행정처리하라"고

씨와 교도소 사방청소부 황모씨에 대해 사건은폐를 회유·협박해 거짓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안모씨는 "당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도소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가해자는 지금도 공무원=박씨의 폭행에 적극 가담했던

### 감호소 의문사 진실밝힌 김광섭-이상훈씨

## 형사-폭력배 두목 기묘한 '인연'

감호소의 부당한 인권탄압에 항의하다 못해 죽고 숨진 뒤 20여년만에 민주화운동 경력이 인정된 박영두씨. 그동안 한낱 집범으로 대우받다 20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진상이 밝혀지기까지 그 뒤에는 범죄자의 경찰로 쫓고 쫓았던 한 고등학교 선후배의 묘한 인연이 숨어 있었다.

숨진 박씨와 함께 감호소내 인권탄압에 항의했던 전 조폭조직의 두목 이상훈(48)씨와 강력반 형사로 수년간 이씨를 쫓았던 진상규명위원회의 김광섭(61)씨. 둘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만나 과거의 악연을 씻고 결정적인 목적지를 찾아내는 등 의문사진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둘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 80년.

고교동문 추적-도망자로 만나 김씨 정년퇴임뒤 규명활동 이씨 수감중 박영두사건 목격 출소뒤 의기투합 '해결사' 역할

당시 영동포 일대 조직폭력배 '대호파' 두목이었던 이씨는 폭력 등으로 경찰서에 드나들면서 형사반장이던 김씨를 만났다.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이씨가 고등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변화시키려 노력했고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씨가 81년 6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재판 중 흉기로 무장한 채 말주, 사회를 떠돌아다니며 만들면서 둘의 관계는 독술을 건 추격전을 벌이는 사이로 변했다. 당시 경찰은 무장탈주범

인 이씨를 사살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총악했던 상황이었다. 이 때 이씨의 자수로 둘의 추격전은 다행히 끝을 맺었다.

이후 이씨는 여러 곳을 거쳐 청송 감호소에 가게됐고 박영두씨를 만나 함께 감호소내 인권탄압에 항의하다 박씨의 죽음을 지켜보게 됐다. 김씨도 지난 98년 퇴직하면서 둘은 영연히 멀어진 듯 했지만 김씨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하게 되면서 운명의 재회가 이뤄졌다.

형사 생활동안 전국 최대 강력사건을 해결, 강력사건의 최고 베테랑으로 인정받았던 김씨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원으로 스카우트됐고 박영두씨 사건을 맡게 됐다. 김씨는 처음 감호소 생활을 조사하기 위해 박씨와 비슷한 시기 감호소생활을 한 이씨를



청송감호소 박영두씨 의문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상훈(왼쪽)씨와 강력반형사로 이씨를 쫓았던 김광섭씨가 답소를 나누고 있다.

찾았다. 이씨는 당시 과거 인연을 모두 끊고 아랫한 사업가로 변신한 상태. 하지만 이씨는 김씨의 집착에 뜻밖에도 당장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둘은 함께 당시 목격자 등 주요 관련자들을 찾아 방방곡곡을 누렸고 사건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둘의 이야기는 곧 소설과 영화로 만

들어질 예정이다. 이씨는 과거 자신의 변화상을 고백한 자서전 '활출'을 준비중이며 벌써 몇몇 곳에서 영화 제작설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베테랑 강력반형사로 유명한 김씨를 모델로 한 '형사'라는 영화시나리오 작업이 끝난 상태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kr

### '공소시효'에 묵인 의문사 단죄

'민주화관련 첫 타살' 가해자 이름 공표만

홍성식 기자 hss@ohmynews.com

25일 오전 10시 종로구 수송동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이하 진상규명위) 사무실에서는 83건의 의문사 관련 조사자 중 처음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타살자로 인정받은 '박영두(84년 청송교도소에서 사망, 당시 29세)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 '박영두 사건' 조사 발표 기자회견. ©2001 홍성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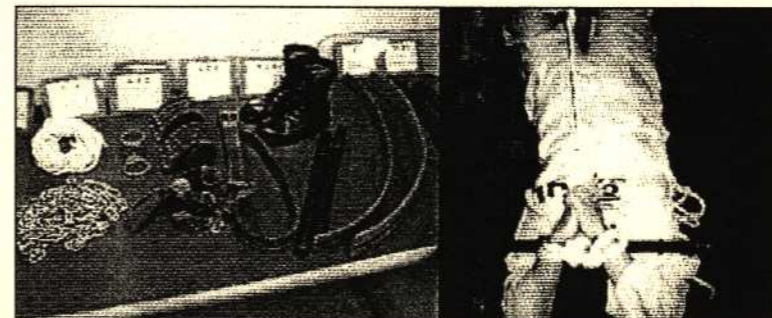
박영두 씨는 삼척교육대 내에서 폭력사태를 유발, 81년 육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군용물손괴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청송교도소로 이감돼 수감중이던 박씨는 84년 10월 '보호감호 철폐'와 '교도관의 폭행근절'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가 같은 달 12일 청송교도소 관구주임 이OO, 관구교사 박OO, 교도 김OO, 김XX 등에게 속칭 '통닭구이'와 '비너꽃기'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했고 다음날인 13일 사망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박씨는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교도관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 인정되고, 비록 재소자였을 망정 권위주의 시대의 불합리한 교도행정에 저항했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신장시키는 적극적 의미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다"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박씨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보상금 심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위원회가 조사해 온 의문사 사건 중 타살 혐의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인권유린에 대한 항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진상규명위는 사건 당시를 재현한 10여 장의 사진과 폭행과 가혹행위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종류의 쇠사슬, 밧줄, 고무호스, 곤봉, 수갑 등도 함께 전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부도덕한 정권 하에서 일어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규명되고,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비단 '박영두 사건'만이 아니라 조사중인 여타의 의문사 사건 또한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이 두려운 사람도 세상엔 있는 법. 진상규명위 조사위원들이 전한 '박영두 사건'과 관련한 아래의 말들은 그것을 입증한다.

- "사람이 숨을 멈추니 심장마비라고 (사인을)판단했다"
- 박영두 사망 당시 부검의 김△△.
-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출두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
- 박영두 폭행 및 가혹행위에 가담한 교도 김○○.

의문사의 진상을 알려낼 수 있는 사람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것 말고도 진상규명위의 어려움은 크다. 사건 자체가 대부분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전의 일이라 관련된 경찰, 검찰문서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고, '박영두 사건'처럼 교도소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의 사실은폐 의혹이 제기된다손치더라도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 진상규명위는 조사를 위한 출석조차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견이 끝나갈 무렵 양승규 위원장은 사건임을 전제하며 "고문과 부당한 공권력을 남용한 살인 등의 사건은 반인권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발견된 진실이 부당과 불합리를 척결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단죄 없는 사실만의 공표에 그친다면, 어렵게 얻어낸 그 진실을 어디에 쓸 것인가? 여기에서 또 지지부진 해체된 한국의 반민특위와 프랑스의 엄중했던 나치협조자 처단을 거론해야 하는가?

## 의문사 타살 첫 인정

### 의문사진상위, 교도관 가혹행위로 사망 확인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가 25일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 의문사한 박영두(사망당시 29세)씨에 대해 타살을 인정한 것은 의문사 첫 진상규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규명위의 이번 결정은 박씨의 의문사에 대한 단순한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비록 폭력전과와 재소자라 할지라도 권위주의 시대 독재권력의 가혹행위에 항거한 그의 행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권위주의시대 재소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항의하다 숨졌으므로 박씨의 죽음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죽음이라는 결론이다.

규명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씨는 84년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숨졌다.

경기 파주의 모 체육사에서 일하던 박씨는 80년 8월 여름휴가차 놀러간 경남 통영 비진도 해수욕장에서 불량배혐의자로 계엄군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박씨는 이후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보호감호 2년처분을 받던 중 군인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83년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러나 박씨는 청송교도소에서도 '폭력 교도관 처벌하라', '재소자의 의무과 치료

및 외래진료 보장하라', '감호법을 철폐 내지 개정하라' 는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집단농성까지 벌였다.

박씨는 또 일반 감호생과 격리돼 특별감옥에 수용돼 있으면서도 재소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청송교도소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외부에 알릴 난동사건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박씨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도 이 같은 난동사건을 피하기 위해 의무과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본때를 보이려는 교도관들의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다음날 84년 10월 13일 숨졌다.

특히 숨지기 앞서 박씨는 가혹행위의 일종인 이른바 '비녀꽃기' '통닭구이' 상태에서 교도관 7~8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1명 미만의 독방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규명위는 밝혔다.

규명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의 의문사가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한 타살임을 인정하는 한편, 교도관들에 항거한 그의 행동이 민주화와 관련 있다고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 사이에 교도관들의 부당한 조치에 줄곧 항의해온 박씨에 대해 악감정을 품은 교도관들이 폭행, 죽음을 당한 것이 과연 민주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연합



## 'Suspicious Death' Case Recognized as Manslaughter

Producing the first results of its investigations into so-called "suspicious deaths" during the period the nation was in political turmoil, a presidential commission said yesterday that it determined the 1984 death of a prison inmate to be a case of manslaughter.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said Park Young-doo, then 29, died a day after guards beat and tortured him for demanding better prison conditions in October 1984.

The commission, formed last year to investigate suspicious deaths of dissidents and citizens during past authoritarian governments, said it would request the current government to deliberate on whether Park should be awarded the same benefits as recognized democratic activists, including compensation for his family members.

In a press conference held after a briefing to President Kim Dae-jung on its findings, the commission also presented as evidence "tools" that guards used to beat and torture Park.

## Presidential panel on suspicious deaths finds beating caused death of inmate

By Kim Min-hee  
Staff reporter

A presidential fact-finding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confirmed yesterday that an inmate who died in prison in 1984 was beaten to death by wardens.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said that Park Yeong-du, then a 29-year-old inmate at Cheongsong Prison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should be honored as a participant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at his family should receive compensation.

It marks the first time the commission, which has conducted probes into 83 suspicious deaths that occurred during past military regimes since last year, has publicly stated that a death they have investigated was the result of a murder.

The commission said it has decided to refer Park's case to a government committee which both restores honor to democratic activists and compensates their families. The commission said it viewed Park's efforts for the human rights of inmates as contributing to the nation's pro-democracy movement.

The commission confirmed the cause of Park's death as murder at a press conference held at its office in Chongno-gu, central Seoul, where they displayed the weapons the prison guards used to torture Park.

According to the commission, Park was subjected to various forms of torture on Oct. 10, 1984, for demanding better conditions for prisoners. Park died the follow-



Yonhap  
Yang Seung-kyu (center), head of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announces that prison inmate Park Yeong-du was tortured to death by wardens in 1984, at a press conference held in downtown Seoul, yesterday.

ing day.

The commission said that based on the testimony of a fellow inmate, there had been a campaign on the part of the prison officials to cover up the cause of Park's death.

The autopsy conducted on Park's body two or three days following his death concluded that Park had died from a heart attack, but suggested the case be reexamined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Park had been serving in the southern prison since 1983 as part of the "Samchong Training Camp," a type of concentration camp introduced by the Chun Doo-hwan regime to discipline people whom it considered detrimental to society.

It is speculated that approximately 60,000 civilians experienced harsh physical training and

torture under the program.

The commission named the four prison guards who tortured Park but will not be able to prosecute them as the period of prescription of execution is over.

The commission has dismissed the case of Kim Je-gang, who died in 1977 at the age of 52. The panel concluded that Kim died from a heart attack.

(mhkim@koreaherald.co.kr)

### 처음으로 인정된 공권력 고문치사

17년전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서 변을 당한 박영두씨의 사인이 공권력의 고문치사로 밝혀졌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박씨가 감호소내 인권탄압에 항의하다 고문받고 숨진 것으로 결론내리고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위원회가 조사해 온 의문사 83건중 민주화운동관련 타살혐의를 인정한 첫 케이스로서 우리는 공권력의 고문치사를 정부기관이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인권사적 의미 또한 각별하다고 본다.

박씨 사건의 전말은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참담한 인권상황뿐 아니라 이후에도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거듭된 시도가 늘 벽에 부딪쳐온 굴곡을 여실히 보여준다. 1980년 신군부가 가계 일을 돕던 20대 청년을 삼청교육대로 연행한 이래 재판없는 육군감호소 이송, 군사법정의 15년형 선고도 모자라

재소자의 인권을 말한다고 죽을 때까지 고문한 것은 무도한 5공 권력의 적나라한 테러일 뿐이다. 이후 6공·문민정권을 거쳐오기까지 그의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을 따름이다. 지난해 12월 한 교도관의 양심적 제보 이전만 해도 가해자의 조직적 은폐가 들어먹혔고 검찰·법원은 그만큼 무력했다.

김대중대통령이 4월9일 정부 각 기관에 대해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라고 지시했으나 이후에도 권력기관의 자료제출·증언이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한다.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조사시한 연장, 조사권 내실화와 함께 '침묵의 카르텔'을 차단할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양심선언자를 위해 사면을 보장하되 그렇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 의문사진상위, 민주화관련 타살 첫인정

25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태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4년 청송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당시 29세)씨는 교도관들에 의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조사 중인 의문사 사건 가운데 타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박영두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0년 7월 계엄군에 붙들려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후 군인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다 군용총손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됐다. 이후 박 씨는 감호소에서도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채 방치됐다가 84년 10월 14일 청송감호소 지하조사실에서 사망했다.

당시 감호소 관계자들은 박 씨 사망 이후 경위서를 조작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부검해 사인을 심장마비로 꾸미는 등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사실 또한 조사 결과 드러났

다. 그러나 위원회는 박 씨를 직접 폭행한 이장술, 박수호, 김의식, 김명겸 씨 등 교도관과 사건을 은폐한 교도소장 김명식·보안과장 서장권·의무과장 서군수·검사 최학성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양승규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반인도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사회보호법에 의거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감호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대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두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는 25일 성명에서 "고문치사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해 가해자들은 처벌 못 하는 것은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한계며 이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승연대는 "현재 공직에 재직중인 박영두 사망 사건 가해자 김명겸·김의식을 파면하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현재 위원회에 박용서(74년·대전교도소), 장석구(75년·서대문), 손운규(76년·대구), 손윤규(76년·대구), 변형만(80년·청주), 김용성(80년·청주), 최석기(80년·대전), 이재문(81년·서대문) 사건 등 육중 사망사건 8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박 씨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금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심대섭)

### 반인권범죄 시효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4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숨진 박영두씨의 사인을 교도관 집단폭행으로 결론을 내고 이를 25일 발표했다. 또 박씨가 재소자 인권보호에 힘쓰는 등 민주화운동에 공이 있음을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한 뒤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공권력의 손에 목숨을 잃은 사례를 밝혀낸 것은 처음이어서 우리사회의 인권신장과 역사 바로세우기에서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위원회는 고 박영두씨 사례를 발표하면서 집단폭행에 가담한 교도관 4명과 책임자인 교도소장·보안과장 등 모두 6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실정법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나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는 못하지만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뜻에서였다. 위원회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위원회가 출범할 때 우리는 의문사 진상을 밝히는 목적이 처벌

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했다. 진실을 밝힘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인권이 어떤 가치보다 앞서는 사회를 이뤄내는 데 교훈으로 삼자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힌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자고도 제의했다.

그런데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가해 당사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출두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로 일관해 조사 자체를 방해했다고 한다. 인권에 반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 흐름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의문사 관련자를 처리하는 원칙을 이제라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본다. 진실을 고백하고 조사에 협력한 사람은 용서하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조사에 저항하는 자들은 엄벌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권에 반하는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확립해야 한다.

### 17년만에 밝혀진 의문사 진상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4년 청송교도소에서 숨진 박영두(朴榮斗)씨의 사인(死因)이 당초 당국에 보고된 심장마비가 아니라 교도관들의 집단폭행이었다고 잇그제 공식 발표했다. 박씨는 재소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다 교도관들로부터 이른바 '비너꽃기' 등 온갖 고문을 당한 뒤 숨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독재정권 시절 공권력의 고문치사를 확인한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12월 한 교도관의 제보로 조사가 시작돼 공권력에 의한 박씨의 억울한 죽음과 당국의 사건 은폐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는 과거 우리의 참담한 인권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사실 박씨가 계엄군에 연행돼 청송교도소에서 숨지기까지의 과정은 도무지 국가권력의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박씨는 불량배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뒤 육군감호소로 이송됐고 군사법정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재소자에 대한 '사람 대접'을 요구하다가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했으니 더 말할 무엇하겠는가.

그런데도 박씨를 죽음으로 내몬 4명의 교도관과 지휘책임자들은 정권이 몇차례 바뀌

어도 끄떡없었다. 박씨가 숨진 뒤 동료 재소자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교도소에서 집단난동을 벌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고 검찰도 재소자들의 고발을 외면했다고 한다.

독재정권 시절 '의문의 죽음'은 비단 박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인이 석연치 않은 경우는 물론 흔적 없이 사라진 사람도 적지 않다. 그 유족들의 피눈물나는 호소로 지난해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발족했고 73년 당시 안기부에서 숨진 서울대 최종길(崔鍾吉)교수 사건 등 80여건의 의문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독재권력의 인권침해 사례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도 의문사의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진상규명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사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현재 사건접수 6개월 안에 1차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3개월을 연장하도록 돼 있으나 압수수색권도 없는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역사에 묻혀가는 사건을 9개월만에 조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기자메모

‘사과없는’ 의문사 규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4년 청송감호소에 수감돼 있던 박영두씨의 죽음에 교도관에 의한 타살이라고 발표한 지난 25일, 법무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3년전 대도(大盜) 조세형씨가 이 문제를 폭로했을 때 “거지말”이라며 발끈하던 때와는 판관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아득히 먼’ 권위주의 시절에 벌어진 것으로 여길지 모른다. 물론 공소시효도 지나 처벌도 어렵다. 하지만 비록 재소자이지만 한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타살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적어도 법무부는 잘못된 교도행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강변하면서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한 법무부는 적잖은 책임이 있다.

더구나 타살에 직접 가담한 교도관이 아직도 버젓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지만 징계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

또 진상규명위의 한 조사관은 “당

시 이 사건 조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당시 검사들의 태도는 직무유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직무태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가해자인 교도관이 이 사건을 은폐했다면, 법무부와 재조사를 담당할 검찰은 이 사건을 합리화하는 데 일조한 셈이다.

사건 발생의 진실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은폐되고 합리화돼 공소시효를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든 경위를 따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과거의 진실만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의 대(對) 국민 사과는 과거에 대한 사과가 아닌 미래에 대한 다짐이기 때문이다.



사회부  
원희복  
wonhb  
@kyunghyang.com

<박영두사건 민주화관련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최근 대통령소속 의문사규명위(위원장 양승규)가 처음으로 타살혐의를 인정한 박영두 의문사 사건의 민주화관련성 여부를 놓고 위원회 게시판에 3일 현재 찬반 관련글이 200여건이나 오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촉발은 위원회가 지난 84년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의 폭행에 숨진 재소자 박씨(당시 29세)의 죽음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 재소자의 기본권을 옹호하다 숨져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고 결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박씨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을 심의요청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위원회에서 당시 가해 교도관 4명의 이름을 공표한후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주축으로 유가족들이 가해자중 한사람으로 알려진 교도관이 근무하는 경북 김천지방법원에 사죄를 촉구하는 원정행의시위를 하자 교도관들의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교도관이라고 한 네티즌은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바란다'는 제목의 글에서 "박영두의 죽음이 진실로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의해 죽었다면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순리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전과3범에 민주화운동 한번 한적 없이 교도소안에서 자신의 정역을 풀기위해, 전두환정권 물러가라, 처우를 개선하라 등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었다는데 대해서는 "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금 전국의 교도소에 6만여명의 살인범을 포함한 각종 범죄자가 수용돼 있는데 이들이 모두 법에 규정된대로 독거수용을 요구하고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할 경우 이들을 모두 민주화운동가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반상만'이란 필명의 교도관은 "지난 25일 아내와 딸과 같이 시장을 보고오다 차안에서 (라디오로) 소식을 접했는데 '아버지도 옛날에 청송에서 근무했어'라는 딸의 말에 25년을 근무한 교도관으로서의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다른 이들은 박씨 등 재소자들이 교도소내 인권침해를 알리기 위해 집단 인질 난동극을 벌인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5대4로 가까스로 민주화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도관들의 이의제기에 맞서 "약 30시간에 걸쳐 10여개의 의견글을 올렸다"는 '고상만'이라는 네티즌은 "가해 교도관들의 행위가 정말 문제 없다면 이제라도 그들 스스로 떳떳이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발'이란 네티즌은 "박영두라는 사람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민주투사로 칭송해야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며 "다만 박영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과 시대적 상황, 당시 당연시된 교도소내의 폭력사실, 그의 죽음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관련기관등의 행태등을 종합해봤을때 이 사건은 분명 이땅의 잘못된 과거와 제도적 장치를 청산하는데 큰 상징과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sungjin@yna.co.kr

시평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홍악법' 박영두의 숭고한 죽음

고 군법회의에서 15년형을 받은 박영두는 청송 제1보호감호소로 이송된다. 그는 청송에서도 보호감호법 철폐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다른 피감호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요시찰 인물로 특별사육에 격리되어 있던 84년 10월, 그는 몸이 아파 의무과에서 치료를 받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교도관들이 그를 데리고 간 곳은 의무과가 아닌 지하실이었다. 곤봉, 파레기(포승을 꼬아 동동이를 만든 것), 학대, 고무호스 그리고 군홧발이 두 시간 동안 난무했다. 3~4차례 의식을 잃었지만 교도관들은 물을 끼얹어가며 가혹 행위를 계속했다. 광풍 뒤편 감방으로 옮겨진 후 구도를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박영두를 교

도관들은 방치했고 몇 시간 후 그는 숨을 거두었다. 눈을 허열개 끼워잡고 그리고 바지에 똥을 뉘 채로...  
지난 6월 25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소문으로만 전해져온 이 사건의 진상을 5개월간에 걸친 조사 끝에 밝혀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후 위원회의 홈페이지는 교도관들의 불만과 비난으로 현기증이 나도록 어지럽다. 추악한 조직

을 받을 정도로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교도관들의 의식과 행동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다.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도전하는 이른바 '홍악법'들의 처우개선 투쟁이 불순한 저의를 가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 사회가 억압적일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기는 '민주투사'나 '홍악법'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든, 그리고 각자가 가진 '저의'가 어떤 것이든 감옥에서의 반 인권적 억압구조에 대한 그들의 저항이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민주화운동'일 수밖에 없다. 교도관들은 입버릇처럼 교도소가 좋아지고 있다고들 하지 않는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인간대우'를 받으려는 수많은 '죄수'들의 처절한 몸부림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아이도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가해자들을 고발하는 데도 실패했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교도소 상층부 공무원들과 담당 감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데도 실패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어렵게 해낸 최소한, 즉 직접 박영두를 죽인 자들의 실명공개를 우리는 그나마 소중한 성과라고 여긴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 이 잡술, 박수호, 김의식, 김명경, 지금도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이들을 더 이상 못지 못하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다.

박영두씨 의문사 조사결과

시민단체-법무부 '갈등'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교도소내 인권탄압에 맞서다 타살된 것으로 결론지은 고 박영두씨 사건에 대해 최근 법무부가 박씨 사건은 무혐의로 이미 종결처리 됐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나서 의문사위원회 및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의문사위원회가 박씨 사건에 대해 타살 결론을 발표한 뒤 법무부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자 '박영두사건 발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박영두 사건 발표'를 인용하여 84년 청송교도소에서 사망한 박영두씨가 교도관들의 집단폭행에 의해 사망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며 박씨 사건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문사조사 타살결론' 부정

공문은 이어 "고 박영두의 사인과 관련한 의혹은 이미 수사, 감정, 재수사와 재정신청 등 적법절차에 의해 사법적인 판단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전결 교정국장 김명환) 명의의 이번 공문은 지난 3일 '계승연대'가 법무부에 현직 법무부 직원으로 살인혐의가 밝혀진 전 교도관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직원 문책 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계승연대'는 이에 대해 "의문사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언론이 이를 인용,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으로 바뀐 것은 법무부가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문사위원회는 모든 조사를 끝낸 뒤 검찰 고발 등 법적 절차를 거처도록 돼 있어 법무부의 이같은 태도는 앞으로 조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계승연대측 항의방문 채비

의문사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날 '법무부가 위원회에 사건 종결발표 이후에도 아무런 자료 요청이나 공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린 적이 없다'며 "그러면서도 민간단체인 계승연대의 요청에 이같이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계승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가 열심히 조사해 결과를 내놓아도 법무부가 이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의문사 진상규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고 지적했다. 계승연대는 위원회 조사결과와 살인혐의가 인정된 현직 법무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방법원과 법무부를 공식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의문사위원회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해당 직원의 문책요청 여부 등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kr

### 내부비리 제보 공무원에 첫 보상결정

#### 의문사 증언·제보자등

공직사회 내부 비리를 제보한 현직 공무원에게 보상결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22일 진상규명작업이 종결된 박영두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현직 교정공무원과 증언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보와 관련, 보

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보자는 박영두씨가 1984년 청송교도소에 수감중 억압적인 교도행정에 반발하다 교도관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숨졌다는 사실을 진상규명위원회에 알렸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신변 보호조치와 제한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교정 공무원은 "사건을 은폐하는 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비민주적 교도행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진상규명위원회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박영두씨와 함께 교도관에게 폭행 당한 안모씨의 증언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돼 보상금 3백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제보자인 교도관은 보상금이 보다 좋은 일에 쓰이기 바란다며 보상금을 사양했다"고 전했다. 원회복기자 wonhb@kyunghyang.com

### 청송교도소 의문사 규명 제보자에 300만원 보상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영두씨가 타살에 의해 숨진 사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영두 사건의 진상을 증언한 안모씨에게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박영두씨와 청송교도소에서 재소생활을 한 안씨는 의문사 진상규명 제보와 관련, 처음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황진영기자 buddy@sgt.co.kr

#### 취재파일

안수찬 민권사회2부 기자



### 달라진 것 없는 법무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달 26일 1984년 청송교도소내 인권탄압에 맞서다 타살된 박영두씨 사건의 전모를 공개했다. 규명위는 당시 폭행 교도관들을 밝혀낸 것은 물론 교도소장과 담당 검사 및 부검의가 사건은폐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죄는 있으나 벌은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을 법정에 세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을 '사회적으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관련 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사안이며, 직원 문책은 의문사규명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폭행가담 교도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과 청송교도소도 "관련자 문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도 변호사와 지방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당시 담당검사와 부검의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공문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혀 규명위의 공식 발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따지고 보면, 박영두씨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상 '가해자'다. 박씨가 당시 해변에서 피서를 즐기다 강제연행되는 순간, 그리고 삼청교육대와 청송교도소의 살인적 폭력에 신음하는 순간, 법무부가 내세우는 '적법절차'가 구현됐다면 억울한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폭행가담자들은 모두 법무부 소속 교도관들이고, 당시 검사와 부검의사의 사건 은폐도 넓은 의미에서 법무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미 적법절차가 끝났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는 맞지 않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 등의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인권신장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사과와 유감의 표시조차 못하는 오늘의 법무부가 인권유린을 자행한 과거의 법무부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ahn@hani.co.kr

중앙 포럼

‘죽음의 진실’ 그후

박영두 사건- 1984년 10월 청송교도소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이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차씨가 교도관의 집단폭행으로 숨졌으나 심장마비 사망으로 조작·은폐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 혐의를 처음으로 밝혀낸 사건이다.

17년만에 풀 의문사 사건

그런데 조사 결과 발표 후 한달이 넘도록 관련된 누구에게서도 사과나 반성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인권 신장을 정권의 치적 가운데 하나로 자랑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과연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 차씨 사건은 처절하다. 당시 25세의 평범한 청년 차씨가 삼정교육대에 끌려가 받은 인간 이하의 대접과 저항,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의 고문과 집단폭행으로 사망하는 과정, 집단폭행 사건의 조작·은폐, 동료 재소자들에 의한 진상규명 시도- 이 사건 조사를 주시하던 사람들은 “17년간 묻혀 있던 ‘죽음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고 했다.

위원회는 차씨에 대한 고문과 집단폭행에 가담하거나 지휘 책임이 있으나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이 불가능한 교도소 관계자 6명의 당시 직책과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 후 교도관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진상규명위원회의 게시판에 사이버 시위를 하듯 앞다퉀 글을 올렸다. “교도관의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는 반박에서 “인질 난동을 부리며 재소자와 교도관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구경만 하란 말이나”는 항의의 글이 대부분이었다. 교도소 난동자가 민주투사가 되고 교도관이 인권 유린의 주범이 돼야 하느냐고 항변한다.

관련 시민단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국민연대는 현재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폭행 관련자 2명 파면, 법무부의 조작·은폐 규명 및 사과를 요구하며 몇차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차씨 폭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발표 후에도 반성·사과가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사실 차씨 사건은 대도(大盜) 조세형을 비롯한 당시 감방 동료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소동을 부려 몇차례나 사회문제가 됐다. 88년 4월엔 재소자 6명이 안동교도소에서 15cm 길이의 칫솔을 삼켜 외래검진을 나갔다가 차씨 사건을 기록한 쪽지를 병원 화장실에 남겨 야당이 조사에 나선 일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진행된 법무부 자체 감사나 국회 조사단 활동·국정감사·재정신청 결과는 진상에 한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 88년 사건 이후 2년간 검사 10명이 동원된 재조사에서도 교도관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천 수  
사회담담 부국장

현직 교정공무원의 제보와 진상규명위의 조사로 실상이 드러난 뒤에도 법무부는 최근 항의방문한 시민단체에 보낸 답변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 사법 판단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단정을 부렸다. 의례적인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었다.

한 국민이 교도소에서 타살되고 그 사인이 조작·은폐됐는데도 법무부 교정당국은 아무 책임이 없는가. 사건 조사를 맡았던

검찰은 진실을 파헤치는 데 최선을 다했는가. 억울한 죽음이 17년간이나 덮여 있도록 방조한 것은 아닌가.

지난 5월 방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 강연에서 ‘용서와 화해’를 강조했다.

반성과 사과 없는 공권력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94년 벨스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한 뒤 과거 백인정권 시절의 이른바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로 빚어진 인권침해 범죄 2만여건을 접수받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6천8백여명의 가해자가 자진출두해 과거를 참회했다고 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죄를 전제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고백하고 책임을 인정할 때는 사면해줬다.

진상을 규명하고 과오를 참회하는 것은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장준하 · 김두황 · 최종길 사건  
관련 보도

# 張俊河先生 타살추정 단서 확보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을 등반하던 중 의문의 변시체로 발견된 재야지도자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타살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단서가 확보돼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당시 장 선생과 함께 약사봉을 등반해 유일하게 사고현장을 목격했던 K씨에 대한 수 차례의 조사 등을 통해 장 선생이 타살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과 단서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K씨는 지난달 31일 장 선생이 실족사한 곳으로 알려진 암벽지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일반인이 맨몸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그동안 "당시 장준하 선생이 등산로에서 벗어나 추락지점 쪽으로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해 왔다.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장 선생

**“실족사 장소인 암벽지점 일반인 맨몸접근 힘들다” 유일한 현장목격자 시인**

의 실족사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과 판독, 현장 모의실험 등을 통해 실족사의 개연성에 대해 조사해 왔다. 또 사건 당시 최초로 수사를 맡았던 의정부지청 S검사(현재 변호사) 등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K씨가 장 선생의 의문사 원인을 밝혀줄 가장 중요한 인물인 만큼 그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수개월간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선생의 죽음이 타살로 결론이 내려라도 그 배후까지 밝히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위원회측의 설명이다.

장준하 선생은 1953년 사상계를 창간해 편집장을 지냈고 5·



장준하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일지

- 75년 8월17일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변시체로 발견 경찰, 단순실족사로 처리
- 93년 3월29일 민주당, 장준하선생 시안규명조사위 구성
- 93년 4월24일 민주당 시안규명조사위 국회차원의 조사 필요하다는 중간활동 보고서 제출
- 2000년 12월 의문사진상규명위 장준하선생 사건 조사착수
- 2001년 5월 31일 진상규명위 사고당시 유일한 목격자와 함께 현장조사 실시

16후 박정희(朴正熙) 정권에 대한 반독재투쟁을 벌이다 옥살이를 반복한 대표적인 재야인사이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 “장준하씨 他殺혐의 짙다”

### 전문가도 오르기 힘든 곳... 실족 가능성 희박 의문사춌 현장 조사, 시신발견 장소 확정

1975년 민주화운동을 하다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등산 중 의문사했던 고(故)장준하(張俊河·사고 당시 64세·전 사상계 발행인)씨 사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당시 사고 신고 및 처리에 관계됐던 인물 전원을 동시에 불러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타살 의혹이 아주 짙어졌다. <관계기사 30면>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유일한 사고 목격자였던 김모(67)씨,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경, 동반 동행자 등과

함께 지난 7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실족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치에 張씨 시신 발견 지점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목격자와 경찰 등 관련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 조사가 벌어진 것은 張씨 사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시신 발견 지점으로 알려졌던 곳의 지형적 여건을 볼 때 실족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확정으로 사건이 타살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씨의 첫 현장 조사 때 산악전문가를 동원해 張씨가 발을 헛디뎠다는 지점이 등산용 자일을 이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자 김씨가 “시신 발견 지점이 알려진 것과 다른 것 같다”는 등 기존의 본인 주장을 뒤집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조사는 위원회 관계자들과 김씨, 전문 산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자일 실험 결과 張씨가 실족사했다'는 김씨 주장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됐다. 위원회의 또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7일의 현장 조사에서 당시 출동했던 군인과 경찰관도 ‘시신의 얼굴에 아무런 상처가 없고 안경도 깨지지 않은 점’ ‘혈흔이 없고 시신이 반듯하게 누워 있는 점’ 등에 비해 김씨의 실족사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윤 기자**

<copipi@joongang.co.kr>

### <장준하 사건 규명 과정>

- ▷ 4월 27일 : 사건 발생 이후 27년 만에 사고 현장인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일대 첫 항공 촬영(군 당국 협조).
- ▷ 5월 : 전문가에게 의뢰해 폭 1.5m 크기의 사고 현장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작해 실족 지점 접근 가능성 여부 검토.
- ▷ 5월 31일 : 전문 산악인 및 목격자를 동원해 ‘실족 지점 접근 불가능’ 판단.
- ▷ 6월 7일 : 사고 목격자 및 당시 출동한 군·경 및 張씨 동반 동행자들과 현장 재조사, 시신 발견 지점 확정해 ‘실족사 가능성 희박한 것’으로 내부 결론.

### 장준하 사건 어떻게 조사했나

## 사고지점 첫 항공촬영 모형 만들어 실험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7일 장준하(張俊河)씨 의문사 사건 관련자 전원을 소환, 현장 조사를 벌여 張씨 시신 발견 지점을 지형상 실족사 가능성이 희박한 지점이라고 확인하기까지는 항공 촬영과 사고 현장 모형물 등 과학적 기법이 동원됐다. <과학적 기법 동원>—사건 직후부터 유족과 민주화 인사들은 “시신의 상태와 지형적 여건 등으로 보아 張씨는 당국 발표대로 실족사한 게 아니다”며 의문을 제기해 왔다. 위원회의 임무는 과거 언론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우선 지난 4월 군 당국의 협조를 얻어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약사봉에 대해 사고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항공 촬영을 실시했다. 검찰이 발표했던 추락 추정 지점은 높이 14m에 경사 70도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형이다.

위원회는 지난 5월 항공촬영 비디오와 사진을 바탕으로 너비 1.5m, 폭 0.8m의 현장 모형을 만들

어 실험했다. 이후 지난달 말에는 전문 산악인들을 대동해 추락 추정 지점 접근을 시도했으며 이 때 산악인들은 등산용 자일을 몸에 묶고서야 그 지점에 닿을 수 있었다.

<장준하씨 사건은>—장준하씨는 1975년 그를 따르던 인사 네명과 함께 약사봉 등반에 나섰다가 숨졌다. 일행이 계곡에서 점심을 준비할 때 張씨는 “바람이나 쐬고 오겠다”며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뒤늦게 도착한 김모(67)씨가 張씨의 뒤를 쫓아 갔다가 “선생님이 발을 헛디뎠다”며 일행에 비보를 전했다.

張씨는 해방 전 광복군 소속으로 독립운동을 했으며 53년 월간지 ‘사상계’를 만들어 반독재 운동을 벌였다. 58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고(故)함석헌 선생의 글을 사상계에 실었다가 필화(筆禍)를 겪기도 했다. 이후 61년 군사 쿠데타 뒤에는 앞장 서서 박정희 독재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수차례 옥고를 치렀다. **성시윤 기자**

<copipi@joongang.co.kr>

### “장준하 타살결론” 청와대 보고

####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밝혀

‘장준하 타살 결론’ 보도(경향신문 6월4일자 1면)와 관련해 이를 확인하는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양승규(梁承圭)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은 12일 “장준하 선생은 타살 혐의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양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 등 개혁3법 위원

회 위원 35명과 함께 김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양위원장은 또 “최종길 교수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사실과 부합되는 점이 있다”고 보고했다.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가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 인근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최종길 교수는 73년 당시 중앙정보부 남산분청사에 끌려간 뒤 변사체로 각각 발견됐다.

원희복기자 wonhib@kyunghyang.com

### 의문사 진상규명위 “장준하 타살의혹 크다”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은 12일 “고 장준하 선생은 여러 가지 정황상 타살 혐의가 짙다”며 “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사실과 부합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진상규명위’ 등 개혁3법 위원회 위원 35명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박찬수 기자 pcs@hani.co.kr

### “故 최종길교수 억울한 죽음”

#### 의문死규명위, 대통령에 보고

양승규(梁承圭)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은 12일 “장준하 선생은 타살 혐의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최종길 교수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사실과 부합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 등 개

혁3법 위원회 위원 35명과 함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고 최종길 교수는 1973년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에 끌려간 뒤 숨졌으나 중앙정보부측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발표했었다. 장준하 선생은 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인근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었다.

김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성의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진국 기자 <jinkook@joongang.co.kr>

### “장준하선생 타살 혐의 커”

#### 의문사규명위 김대통령 보고

양승규(梁承圭)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은 12일 “장준하(張俊河) 선생은 타살혐의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종길(崔鐘吉) 교수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사실과 부합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 등 개혁 3법 위원회 위원 35명과 함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생전이든 사후든 진실이 밝혀져 정의가 이긴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사회는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면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당연한 성의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오동연기자 poongynn@kdaily.com

# “장준하·최종길씨 타살혐의 짚다”

## 의문사 규명추 청와대보고

양승규(梁承圭)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장은 12일 “장준하(張俊河) 선생은 타살혐의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종길(崔鍾吉) 교수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사실과 부합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 주 4·3 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위원 35명과 함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고 최종길 교수는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변시체로 발견됐고 장준하 선생은 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 근처에서 의문의 변시체로 발견됐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생전이든 사후든 진실이 밝혀져 정의가 이긴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사회는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면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leey@hk.co.kr

의문사 규명추, 장준하·최종길씨 타살추정 배경

# “추락사” 불구 外傷 전혀 없어

## 75년 장준하 선생 사건

장준하(張俊河·사진) 선생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대부(泰斗)다. 최초의 ‘재야인사’로 인식되는 그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역대 독재정권의 탄압을 한 몸에 받았다. 1975년 사망 직후부터 순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단순 실족사’란 당시 수사당국의 발표에 이어 긴급조치 적용 등 역대 정권의 서슬퍼런 통제로 4 번째가 넘게 그의 죽음은 베일에 가려 있었다.

1918년 평북 삭주 태생인 그는 44년 일제의 학도병에 동원됐다. 탈출, 중국에서 광복군으로 활동했다. 해방 후 김 구(金九) 선생 비서 등을 지내다 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 이승만 정권 하에서 국내 대표적 인 지성인 집지로 키워냈다.

‘사상계’는 58년 함석헌(咸錫憲) 선생의 ‘생각하는 백성’이라는 신간을 게재해 궤멸을 입은 것을 필두로 70년 김지하(金芝河)의 시 ‘오적’ 게재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권위주의 정



나섰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행인 등의 증언에 따르면 일행이 계곡에서 점심을 준비할 때 그 혼자 ‘바람이나 쐬고 오겠다’며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뒤늦게 도착해 뒤쫓아갔던 당시 목격자 김모(67)씨가 ‘선생님이 발을 헛디뎠다’며 다행이라며 일행에게 비보를 전했다는 것이다.

93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장준하 선생 시인규명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 타살을 주장하며 국정조사까지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죽음을 타살로 추정하는 근거는 ▲사고지점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한 점 ▲추락사에도

불구, 외상이 전혀 없는 점 ▲당시 수사당국이 현장검증을 생략한 점 ▲최초 검시의의 양심선언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의문의 군인 2명 등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약사봉 일대 항공촬영과 지난달 31일 목격자 김씨 소환 등 치밀한 조사를 벌여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 주변 의문의 군인 2명 현장검증 생략도 의혹

관예견 ‘눈엣가시’였다. 대학생과 지식인들에게는 ‘지성과 민주화 의본신’과 같은 접지였다.

장준하 선생은 51년 5·16 쿠데타 후, ‘박정희 대통령 불가론’을 주장하다 66년 국가원수 모독죄로 구속되는 등 무려 9차례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그는 75년 측근 인사 4명과 함께 경기 포천군의 약사봉 등반에

# ‘즉사’ 발표와 달리 “후송” 증언

## 73년 최종길 교수 사건

‘타살’을 ‘자살’로 둔갑시킨 그들은 누구일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의문사 1호’ 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사진) 교수는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보고함에 따라 사건 축소·왜곡 과정과 명령 계통에 대한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73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최씨는 10월16일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참고인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감찰실 직원인 동생 종선(鍾善·54·미국 거주)씨와 함께 중정에 자진 출두했다 사흘만인 10월19일 의문의 변시체로 발견됐다. 당시 중정은 최씨가 조사를 받던 도중 중정 남산본관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으며, ‘양심의 가책에 따른 자살’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88년에는 민주화 물결을 타고 검찰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진상은 다



‘부검에 참여해 자살로 합의해 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화유한 사실 ▲투신자살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추락장소에 혈흔이 전혀 없었다는 88년 중정 고위간부의 진술 ▲함께 조사를 받은 김장현(당시 경제과학심의회의 분석관)씨가 최씨가 (고문의 후유증인 듯) 다리를 절룩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들어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즉사’했다는 중정의 발표와는 달리 살아있는 상태에서 응급처를 타고 병원에 후송됐다는 진술 등도 타살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관련 사실을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타살을 입증할 수 있는 일부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체적인 사건 축소·왜곡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조사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 부검사진엔 고문 상처 당시 中情은 동생회유

시 어둠 속에 묻혔고, 이후 최씨 사건은 대표적인 의문사의 하나로 유족과 민주화세력의 끊임 없는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88년 공개된 부검 사진에는 다리와 엉덩이 부분에 (고문으로) 찢겨진 상처가 있고 ▲중정이 동생 종선씨에게

### 의문사 진상 반드시 밝혀야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장준하 선생과 최종길 교수의 죽음이 타살 혐의가 짙다고 보고했다. 암울했던 시대의 대표적 의문사 의혹을 정부 기관이 공식 확인한 것은 그 진상 규명을 국가적 과제로 부각시킨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국가 기관과 사회 전체가 진상 규명 작업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할 것을 먼저 촉구한다.

진상규명위가 다루고 있는 의문사 81건 가운데서도, 이번에 의혹을 확인한 두 사건의 상징성은 각별하다. 장준하 선생은 일제 하에서 유신 체제에 이르기까지 애국애족과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쳐 투쟁한 실천적 지식인의 표본이다. 최종길 교수도 독재의 위세 앞에 양심과 비판 정신을 지킨 울곧은 학자였다. 이런 지식인들이 독재 권력과 하수인들에 의해 타살된 의혹은 지난 날의 슬한 인권 유린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두 사건의 진상 규명은 우리 사회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미래를 여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절대 권력과 직접 맞섰던 장준하 선생과, 그 권력의 하수기관 중앙정보부에서 죽은 최 교수의 의문사를 밝히지 않고는 다른 의문사 의혹 규명도 빛이

바랄 것으로 본다.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진상 규명에는 무엇보다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의 협조와 양심의 고백이 절실하다. 진상규명위의 조사활동은 범죄의 구체적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장준하 선생 사건은 실족사가 아니라 정황이 뚜렷하지만, 정작 타살 범행을 저지른 조직과 배후를 추적할 단서는 없다. 최 교수 사건도 고문치사로 단정할 정황과 일부 증언이 있지만, 진상 은폐 전모는 관련자들의 침묵에 가려져 있다.

여기서 의문사 규명은 과거 죄상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양심에 남은 상처까지 치유하는 대화합 노력임을 거듭 강조한다. 수십 년 전 죄업을 짊어진 이들이 스스로 고통스런 기억을 털어 놓고, 정의와 인권 정착을 향한 대열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진상규명위가 추진하는 조사기한 연장과 강제조사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적극적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반민주·반인권적 유산의 청산을 의미하면서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배려 등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에 얽매진다면, 진정한 과거 청산은 어렵다.

### 의문사규명위에 힘 실어주자

지난해 10월 발족한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성과물들이 띄엄띄엄 나오고 있다.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은 12일 1970년대 저명한 재야인사였던 장준하씨의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정황상 타살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신독재 초기였던 73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가 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최종길 당시 서울대 교수에 관해서는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사실과 부합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의 발언을 접하고 반갑기도 하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반갑다는 것은 암울한 유신독재 시대의 대표적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명쾌한 설명 없이 '정황상 혐의가 짙다'는 표현 정도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귀가 집중된 저명인사 관련 사건의 진척 상태가 이

렇진대,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들의 진상규명 작업은 더 큰 난관에 부딪쳐 있을 것이다. 규명위의 작업이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성의부족이나 게으름 탓은 아닐 것이다. 진상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려면 규명위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명위 관련 법 개정 작업은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우선 규명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점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건에 연관됐을 혐의가 짙은 기관이나 개인이 조사활동에 거의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명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다면 돌파구를 열기가 힘들다고 본다. 그리고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가 거둔 성과를 참조해서 진상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사면권을 신속적으로 행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공 군의문사 타살시사 물증 발견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5공화국 당시 학생운동 참가자가 군복무중 사망, 자살로 처리된 사건들중 자살 가능성을 낮추는 결정적 물증이 최초로 발견됐다.

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3년 군 복무중 의문사한 고려대생 김두황(당시 23살)씨의 유서라고 당시 군 수사당국이 발표한 필적이 김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씨 사망사건을 다룬 군 헌병대는 김씨의 호주머니에서 김지하 시인의 '끝'이라는 시를 옮겨적은 편지가 발견되자 이를 김씨가 작성한 유서라고 유족에게 제시하고 김씨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군은 '죽기 전에 기어이 결별의 글 한 줄은 써두고 가마'라는 시 구절과 편지의 필적이 김씨와 동일하다는 당시 육군과학수사연구소(현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결과를 근거로 김씨가 군생활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들의 의문 제기로 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김씨의 학생운동 시절 한 동료로부터 '김씨에게 시를 적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이 동료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문제의 편지 필체와 동일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김씨가 이 편지를 썼다는 당시 감정결과가 군 당국에서 김씨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지은 유일한 근거"라고 밝혀 김씨가 자살했다는 과거 군 발표가 사실상 허위로 판명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씨의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상황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해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김씨는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 재학중인 83년 학생운동과 관련해 강제징집됐다 가 그해 6월 18일 육군 모 부대안에서 총상을 입고 머리 부분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jhpark@yna.co.kr

(끝)

“軍의문사 김두황씨 유서는 친구필적”

규명위, 타살가능성 확인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지난 83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고려대생 김두황씨(당시 23살)의 유서라고 당시 군 수사당국이 발표한 필적이 김씨 것이 아니라 친구 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 사망사건을 다룬 군 헌병대는 당시 김씨의 호주머니에서 김지하 시인의 '끝'이라는 시를 옮겨 적은 편지가 발견되자 당시 육군과학수사연구소(현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를 김씨가 작성

한 유서라며 김씨가 군 생활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족의 의문 제기로 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김씨의 학생운동 시절 한 동료로부터 '김씨에게 시를 적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이 동료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문제의 편지 필체와 동일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군은 김씨 자살의 유일한 근거로 이 편지를 제시했다”며 “사건정황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해 김씨의 피살 여부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 “軍의문사 김두항씨 유서는 친구 필적”

#### 진상규명위, 자살증거 뒤집어

1983년 군 복무 중 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고려대생 김두항(당시 23세·학생운동으로 강제 징집)씨의 의문사 사건에 대해 당시 발표내용을 뒤집는 증거가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www.truthfinder.go.kr)는 8일 “사고 당시 군 당국이 ‘김씨가 작성했다’고 유족측에 제시했던 유서는 김씨의 동료가 김씨에게 보냈던 편지였다”면서 “최근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 동료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김씨의 타살 가능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군은 “김씨의 옷 주머니에서 자살을 의미하는 구절이 담긴 편지

가 발견됐다”면서 “육군과학수사연구소(현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 김씨 필적이 맞다”고 유족에게 통보하고 김씨가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성시윤 기자

<copipi@joongang.co.kr>

### 군의문사 대학생 타살 증거 발견

#### ‘유서’ 친구 편지로 밝혀져 김두항씨사건 재조사키로

1983년 군복무 중 의문사한 고려대생 김두항(당시 23살)씨의 타살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8일 “사건 당시 군당국이 김씨의 유서라고 발표한 글을 정밀조사한 결과, 김씨의 필적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씨가 타살당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씨 사망사건을 다룬 군 현

병대는 김씨의 호주머니에서 김지하 시인의 ‘끝’이라는 시를 옮겨적은 편지가 발견되자, 이를 김씨가 작성한 유서라고 유족에게 제시하고 김씨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문사규명위원회는 지난 달 김씨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의 옛 친구로부터 “김씨에게 시를 적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문제의 편지 필체가 김씨가 아닌 김씨 친구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 ‘軍의문사’ 18년만에 재조사

#### 김두항씨 유서 타인필체 확인 대통령직속 진상규명위 발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1983년 군 복무중 의문사한 고려대생 김두항(당시 23살)씨의 유서라고 당시 군 수사당국이 발표한 필적이 김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 사망사건을 다룬 군 현병대는 김씨의 호주머니에서 김지하 시인의 ‘끝’이라는 시를 옮겨적은 편지가 발견되자 육군과학수사연구소(현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김씨가 군생활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들의 의문 제기로 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김씨의 학생운동 시절 한 동료로부터 ‘김씨에게 시를 적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이 동료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문제의 편지 필체와 동일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씨의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상황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해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김씨는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83년 학생운동과 관련해 강제징집됐다가 그 해 6월18일 육군 모 부대안에서 총상을 입고 머리 부분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 자살 처리된 5공 군의문사 타살 암시 물증 최초 발견

## 유서 필적감정 거짓으로 판명

5공화국 당시 강제징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사망, 자살로 처리됐던 운동권 학생이 타살로 사망했음을 시사하는 물증이 최초로 발견됐다.

8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3년 군 복무중 의문사한 고려대생 김두환(당시 23살)씨의 결정적 자살판정 물증인 유서의 필적이 김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김씨의 타살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판단,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군 헌병대는 당시 김씨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김지하의 시 '끝'의 구절인 '죽기전에 기어이 결별의 글 한 줄은 써두고 가마'라는 글이 쓰인 편지지는 김씨가 작성한 유서라며 사인을 자살로 판정 발표했다.

특히 군은 당시 육군과학수사연구소(현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을 의뢰, 김씨와 동일하다는

감정결과를 근거로 김씨가 군생활을 비판,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해 온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진상규명위가 조사를 하던 중 지난달 하순 김씨의 학생운동 시절 동료 A씨로부터 '김씨에게 시 구절이 쓰인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관련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문제의 편지 필체와 A씨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진상규명위 문덕형 제2상임위원은 "김씨가 편지를 썼다는 감정결과가 당시 자살로 결론지은 결정적 증거였다"며 "군 발표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정밀 조사를 통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고대 경제학과 4학년이던 지난 83년, 강제징집된 후 그해 6월18일 육군 모부대 안에서 4발의 총상을 입고 머리 부분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 "의문사 최종길씨 '간첩자백' 사실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 '의문사 1호'로 손꼽히는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사인과 관련, 지난 73년 중앙정보부 발표와 달리 최교수가 '유럽거점 간첩단' 일원임을 자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가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20일 "중정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와 당시 수사기록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시인한후 자책감에 중정건물 7층 화장실에서 떨어져 자살했다'고 거짓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또 "최근 국내 외상학회뿐 아니라 재야 법의학자들까지도 최 교수 사망사건과 당시 검시기록등을 검토한 결과, '최 교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중정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이 틀림없다'고 전해왔다"며 "최교수가 중정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당한 사실도 새로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최교수 의문사 사건의 실체는 지난 73년 유신체제에 항거해 서울대생들의 첫 데모가 일어나자 박정희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최교수를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에 엮어 조사하던 과정에서 최교수가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교수 사망사건에 대한 당시 중정 감찰기록에 수사관이 최교수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들어 있었다"며 "하지만 최교수가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으나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교수의 직접 사인이 추락사임에 비취 최교수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거나, 가사상태에 있는 그를 수사관들이 밀어떨어뜨린 것등 둘중의 하나 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최교수가 고문을 수반한 중정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50년대 후반 독일 유학시절 공산정권하인 동베를린을 다녀온 점을 털어놓게 되고, 유력한 간첩용의자로 떠오른 친구 이모씨(현재 북한거주)와 평범한 안부 서신을 주고받은 것 등이 간첩혐의로 추가되자 정신적, 신체적 압박감과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 투신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조만간 최교수 사건과 관련, 당시 중정 실무 책임자와 일선 수사관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인후 내부 논의를 거쳐 최교수의 죽음이 민주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죽음인지를 결정후 이를 공식발표할 방침이다.

sungjin@yna.co.kr

(끝)

### “간첩 자백한 사실없고 가혹행위”

## 의문사 최종길교수 中情발표 허위

#### 진상규명위 “사인은 불분명”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의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조사 도중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허위발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당시 수사기록과 중정 수사관 등에 대한 조사결과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중정이 ‘최교수가 간첩임을 시인한 뒤 양심에 따른 자책감에서 중정

건물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라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또 “당시 중정의 감찰기록과 중정조사관 등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최교수가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며 “중정 건물에서 고문을 당해 다리를 절룩거리던 최교수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최교수의 사망원인이 고문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국내 외상학회와 재야 법의

학회 등에서 당시 검시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최교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최교수가 투신자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서울대 법대에 재직중이던 지난 73년 10월16일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참고인으로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 직원이던 동생 종선씨(54·미국 거주)와 함께 중정에 자진 출두했다가 사흘만인 10월19일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돼 고문치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 의문사 최종길교수 ‘간첩’ 자백 안했다

#### 진상규명위 “중정 거짓발표”

박정희 유신체제하 ‘의문사 1호’로 꼽히는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사인과 관련, 지난 73년 중앙정보부 발표와 달리 최교수가 ‘유럽거점 간첩단’ 일원임을 자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대통령소속 의문

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밝혔다.

진상규명위측은 20일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간첩이라고 시인한 후 자책감에 중정건물 7층에서 떨어져 자살했다’고 거짓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 의문사 최종길교수 간첩 자백 안했다

#### 진상위 “中情서 허위발표”

#### 당시 수사관 고문 시인

‘의문사 1호’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사진) 교수의 사인과 관련, 당시 중앙정보부(중정) 발표와는 달리 최교수가 ‘유럽거점 간첩단’의 일원임을 자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20일 “당시 중정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최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최교수가 조사과정에서 간첩임을 시인한 후 자책감에 빠져 중정 남산본실 7층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허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당시 검시기록을 검토한 결과 시체 엉덩이 부분에 멍든 흔적이 발견되는 등 최교수가 중정 수사관들에게 고문당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고문 가해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진술은 받지 못했지만 수사에 참여했던 다른 수사



관이 고문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교수 의문사 사건의 실체는 1973년 대학생들의 반(反) 유신독재 시위가

불붙자 박정희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최교수를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에 연루시켜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교수가 무고하게 희생된 것일 가능성이 커졌다.

위원회는 최교수의 사인에 대해 ▶ 고문치사 가능성 ▶ 고문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했을 가능성 ▶ 모욕적인 수사 방식에 항거해 투신 자살했을 가능성 ▶ 고문에 의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사관들이 최교수를 건물 밖으로 내던졌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법의학적 조사와 함께 당시 중정 고위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교수는 73년 10월 16일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의 참고인으로 중정에 자진 출두했다가 사흘 뒤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정현목 기자

<goihm@joongang.co.kr>



# 최종길교수 '간첩' 자백 조작

## 중정 수사기록 검토서 드러나...가혹행위도 확인

### 의문사규명위 조사 결과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중정)에서 이른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마치 최 교수가 간첩 혐의를 시인한 것처럼 사후에 조서를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20일 "당시 중정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중정이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시인한 뒤 자책감에 중정 건물 7층 화장실에서 떨어져 자살했다'고 거짓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수사관들이 최 교수가 간첩 혐의

를 시인했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며 "조사 과정에서 최 교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중정이 최 교수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규명위는 당시 고문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남아 있는 최 교수의 주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최 교수의 영명기와 허벅지 등에 피멍이나 있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당시 수사관의 고문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규명위의 이번 발표는 최 교수가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간첩사건의 희생자가 됐다는 사실을 밝힌 것에서 최 교수 사망원인 규명에 새로운 전기를 열게 됐다.

그러나 규명위는 "조사과정의 가혹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당시 검시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최 교수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계의 주장이 나와, 최 교수가 투신자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지만 아직 사망의 구체적 원인과 은폐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최 교수가 △고문에 의한 치사 가능성 △고문을 피할 목적으로 투신자살했을 가능성 △모욕적인 수사방식에 항의해 투신자살했을 가능성 △고문 뒤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내던졌을 가능성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를 벌여왔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에 재직하던 73년 10월 16일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참고인으로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 직원이면 동생 종선(54·미국 거주)씨와 함께 중정에 자진 출두했다가 사흘만인 10월 19일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됐다. 인수한 기자 ahn@hani.co.kr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일 고문의 흔적으로 추정되며 공개한 서울대 최종길 교수의 영문 영명기 사진.

## 維新 의문사1호 서울대 최종길 교수

# "고문 타살 가능성"

### 의문사조 '간첩 자백한적 없고 고문도 확인'

유신체제하의 '의문사 1호'로 꼽히는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 교수는 고문에 의해 타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 교수가 간첩사실을 자백했다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1973년 중앙정보부 발표나 88년 검찰 재수사 결과와는 달리 ▲최 교수가 '유럽거점 간첩단' 일원이란 자백한 적이 없고 ▲중정 수사관에 의해 고문을 당했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시 최 교수 '피의자 신문조서'의 간첩자백 부분은 최 교수 사후 수사관들이 임의로 작성했음이 확인되는 등 "간첩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 교수의 사망원인과 관련, "고문 치사"에서 '투신 자살'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고문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신사진과 검시기록을 검토한 결과, 투신자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러났다"며 "더욱이 중정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조사자(최 교수)가 청사 내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투신자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위원회는 당시 중정부장이던 이후락씨가 어떤 형태로든 사건의 진상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교수로 재직하던 73년 10월 16일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참고인으로 중정에 자진 출두했다 3일 만인 19일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중정은 '최 교수가 간첩임을 시인한 후 죄책감에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으며, 88년 검찰은 '최 교수가 만류하는 중정 직원을 뿌리치고 화장실에서 투신했다'고 결론짓고 관련 직원을 문책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정영모기자 young5@hk.co.kr



28년 만에 간첩 누명이 벗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생전에 유럽을 여행하던 모습.



최종길 교수 추락상할도 (1988년 10월 발표)

## 9세 아들 法大교수되어 '先親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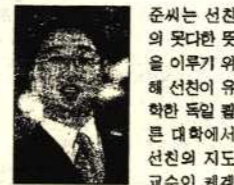
### 당시 中情근무 동생, 美서 수기퍼내

### 최교수 가족 한때는 28년

"감춰진 진실의 한 조각을 밝히느라 28년을 허비했습니다."

군사독재의 억압에 스러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당시 42) 교수의 '간첩 누명'이 벗겨진 20일, 아들 광준(光準·37·시진·경희대 법대 교수)씨는 "선친을 간첩으로 몰아낸 당시 중앙정보부의 논리가 깨졌으니 이제 가해자가 말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의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유족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선친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을 때 9세이던 광준씨는 '선친의 간첩 누명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5차례나 전학을 다녔고 중정의 감시로 추모미사마저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광



(Kegel) 교수를 사사(師事)하고 선친의 미완성 원고를 다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동생 종선(鍾善·54·재미 사업)씨의 배 짝은 노력도 배움을 수 없다. 그는 '내가 근무하던 중정에서 형이 숨진 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8년간이나 '호랑이 굴'에 계속 근무하는 등 파란만장하게 살았다'고 회고했다.

형제의 운명은 비극적이었다. 73년 10월 16일 최 교수를 서울

남산 중정에 자진출두케 한 사람은 바로 종선씨. 그 때 중정에 수석 협력해 감찰실에 근무하던 그는 남산에 온 형과 나는 대화를 맞을 수 없다. '못난 동생 직장 한번 봐두시라.' 허허! 말로만 들던 남산에 들어와 보느구나.

종선씨는 이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정이 발표한 투신 시간이 모든 창문이 잠겨 있을 때였고 1.5m 높이에 있는 가로 1m, 세로 1.5m 크기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최 교수를 말할 수 없었다는 시건 발표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 종선씨는 당시 중정의 김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적 충격을 가장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뒤 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후 종선씨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지난 3월에는 '산자여 말하라, 나의 형 최종길 교수는 이렇게 죽었다'라는 수기를 출간하기도 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1973년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사진) 교수가 당시 중정 발표와 달리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교수가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백정희(朴正熙) 유신체제의 '의문사 1호'로 손꼽혔던 최교수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에 전기가 마련됐다.



## 의문사 최종길교수 '간첩자백' 없었다

### 진상규명투 발표

▽조사 결과=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의 김형태(金亨泰) 제1상임위원장은 20일 최교수 사인에 관한 중간발표에서 "당시 수사관들이 최교수를 심문한 문답자료(100여쪽)를 두 달 전 국정원에서 넘겨받았는데 여기에는 '간첩'이라는 말조차 언급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일부 수사관에게서도 최교수가 자백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최교수가 간첩이라는 자백을 한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중정 건물 7층 화장실에서 떨어졌다'는 당시 중정 발표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 1월부터 당시 수사관 10명과 경비원을 포함한 옛 중정 직원, 법의학자 등 총 182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사관들이 최교수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최교수 죽음의 실체는 '유신체제에 항거해 서울대 학생들의 첫 데모가 일어나자 박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유혈거점 간첩단 사건에 최교수를 엮어 넣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유족 반응=고인의 아들인 최광준(崔光準·38) 경희대 법대 교수는 "위원회의 발표내용은 그동안 유족이 제기해온 간첩 무혐의 주장을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씨는 "당시 중정에서는 고인이 평양에서 보름간이나 간첩교육을 받았으며 노동당 입당까지 했다는 터무니없는 조작을 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고인이 조사 받을 당시(73년 10월16일 혹은 17일경) '학교 직원 두 분이 칼테니 수첩을 내주라'는 고인의 친필 메모를 들고 중정 직원(나중에 알고 보니) 두 명이 집에 찾아와 고인의 수첩을 가져갔다"며 "그런데 중정은 10월19일 고인의 사망사실을 발표하면서 '최교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난수표와 간첩들의 연락망이 적힌 수첩이 발견됐다'고 억지를 부렸다"고 말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88년 검찰조사 때 공개된 부검 사진에는 다리 위쪽에 이 부분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었는데도 정

부는 고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위원회 발표에 의미를 두었다. 이에 따라 최교수의 유족은 최교수의 직접 사인과 관련, '간첩이 아니었다면 자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타살'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가혹행위가 목숨을 잃게 할 정도였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최교수의 직접 사인이 추락사였다는 것을 전제할 때 스스로 뛰어내렸거나 가사(假死) 상태에 있는 그를 누군가가 밀어 떨어뜨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교수를 집중 심문했던 당시 수사관을 만나러 미국에까지 갔으나 본인의 연감한 조사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진상규명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최교수는 73년 10월16일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참고인으로 당시 중정 감찰실 직원이면 동생 중선(鍾善·54·미국 거주)씨와 함께 중정에 자진출두했다가 서울 만인 10월19일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허문명·김정안기자>

angelhub@donga.com

## 최종길교수 中情서 고문 '간첩자백' 사실과 달라

### 의문사진상규명위 확인

유신체제의 '의문사 1호'로 알려진 고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법대 교수가 무고하게 희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20일 "최교수가 간첩이라고 시인한 후 자책감을 못이겨 7층 화장실에서 투신했다"는 지난 73년의 중앙정보부 발표와는 달리 간첩이라고 자백하지 않았음이 공식 확인됐다"면서 "중정의 수사관들이 최교수를 고문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최교수 사건을 조사했던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중정 수사관 182명을 조사한 결과와 7,000여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진상규명위는 "최교수의 직접 사인이 추락사로 밝혀짐에 따라 최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가사 상태에 서 수사관들이 건물 밖으로 내던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따른 타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법의학적 접근 방식 등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교수는 당시 중정으로부터 50년대 후반 독일 유학시절 공산 치하인 동베를린을 다녀왔고, 간첩 용의자인 친구 이모씨(현재 북한 거주)와 인부 서신을 주고 받아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위는 조만간 최교수 의문사와 관련, 당시 중앙정보부 실무책임자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벌인 뒤 최교수의 죽음이 민주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죽음인지를 결정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 박록삼기자 youngtan@kdaily.com

# “의문死 최종길 교수 간첩자백 안했다”

## 진상규명위원회 발표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당시 42세·사진) 교수가 중정 발표와 달리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가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고문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신정권 시절 ‘의문사 1호’로 꼽히는 최 교수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최 교수는 73년 10월 16일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참고인으로 당시 중정 감찰실 직원이던 동생 종선씨와 함께 중정에 자진출두했다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중간발표를 통해 “당시 수사관들이 조사한 최 교수에 대한 수사기록(100여쪽) 등에는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중정이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시인한 후 자책감에 중정건물 7층 화장실에서 떨어져 자살했다’는 발표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최근 국내 외상(外傷)학회 등 전문가들도 최 교수의 검시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살아 있는 상태에서 중정건물에서 떨어



져 사망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옛 중정 직원 등 180여명을 조사한 결과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고문한 사실도 새로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최 교수 의문사 사건은 ‘유신체제에 항거해 서울대생들의 첫 대모가 일어나자 박정희정권이 국면전환용으로 최 교수를 유령거점 간첩단 사건에 엮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유족들의

## ‘자책감에 투신’ 中情발표 거짓 수사관들 고문 사실도 밝혀져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미흡하지만 의미있는 발표”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위원회 발표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제기해온 간첩 무혐의 주장을 정부차원에서 처음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88년 검찰조사 때 공개된 부검 사진에는 다리와 엉덩이 부분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찢어진 상처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고문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가혹행위가 목숨을 잃게 할 정도였는지는 불확실하며, 사인이 추락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뛰어내렸거나 누군가 뒤에서 밀어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崔源錫기자 yuwhan29@chosun.com

# 최종길교수 ‘간첩자백’ 없었다

### 의문사규명위, 中情 거짓발표 밝혀내...이후락씨 소환검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 김형태 상임위원은 20일 “1973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관련, 당초 중앙정보부 발표와 다른 점이 확인됐다”며 “좀 더 조사를 거쳐 부장 위치에서 허위로라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면 이후락 전 부장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건 보고라인은 조일제 중

정 차장보-김치열 차장-이후락 부장으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당초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시인했다는 진술조서가 사건 후 조작된 것으로 판명됐고, 당시 중정 감찰문건에도 ‘간첩 자백이 없다’고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보부는 73년 10월25일 서울대 법대 최교수가 정보부에서 간첩임을 시인하고 여죄를 추궁받다 침문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현행법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관련기관의 승낙이 있어야 진술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어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현 국정원의 반응이 주목된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 “의문사 최종길교수 간첩자백 한적없다” 진상위 “中情서 거짓말”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 ‘의문사 1호’로 역사 속에 묻힌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사인과 관련, 1973년 중앙정보부 발표와 달리 최 교수가 ‘유럽거점 간첩단’ 일원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시 중정 실무 책임자와 일선 수사관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인 후 최 교수의 죽음이 민주화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공식발표할 방침이다.

/김종수기자 katusa19@sgt.co.kr

# 최종길 교수 '간첩자백' 사실과 달라

## 중앙정보부 고문 행위 밝혀져...의문사진상규명위, 고문치사 여부 등 계속 조사

고 최종길(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가 '간첩자백'을 했다는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교수가 중정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받은 사실이 정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최교수가 '유령처럼

간첩단' 일원임을 자백했다는 중정의 발표는 어떤 증거자료도 없음이 확인됐다"며 "중정 수사관들이 최교수를 고문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3면

도 진상규명위는 "고문을 통해 얻어내고자 한 사실이나 고문의 정도, 양상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교수 사건은 지난 73년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서울대생들의 첫 시위가 일어나자 박정희 정권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최교수를 무고하게 희생시킨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상규명위는 △고문 치사 △고문을 피해 투신자살 △모욕적 수사 방식에 항거 투신자살 △수사관들이 최교수를 밖으로 던져 타살 등 최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할 계획이다.

김형태 진상규명위 제1상임위원은 "법외적 접근 방식 등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시

도를 하고 있다"며 "어느 곳에 법외적 접근을 구했는지는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경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사무처장은 "최교수가 중정에 의해 고문을 받은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당시 발표가 거짓임을 말해준다"며 "최교수의 직접사인이 타살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정은 지난 73년 10월 25일 "최교수가 73년 10월 19일 새벽 1시 45분 북한의 간첩임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중정 남산본실 7층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wr.com

### 최종길 교수 의문사 규명 쟁점과 전망

# 타살여부 확인이 열쇠

## 의문사 진상규명 성패 좌우...장준하 선생 사건 영향 미칠 듯

'의문사 1호'로 불리는 고 최종길 교수 사건과 관련, 당시 중앙정보부가 최씨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민주화 인사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정보기관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교수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의문사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는 최교수 타살 여부 등 핵심 논란은 당시 중정 실무책임자와 수사관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이는 등 충분한 조사와 검증 등을 통해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중정의 타살이 공식 확인될 경우, 장준하 선생 사건 등 대표적 의문사에 대한 실제 규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거해 판단할 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살의 동기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점"이라며 "의혹의 출발점이 여기라는 점 외에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의 고심의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진상규명위가 고문치사로 공식확인했던 박영두씨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고문에 가담했던 당사자가 현재 공무원으로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

난 이유로 별다른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위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단체들은 진상규명위가 관련 기관과 당사자의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실제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정권에서 의문사 수사가 결말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 정권에 가서는 그대로 묻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최교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는 의문사 진상규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wr.com

# Facts About the Mysterious Death of Prof. Tsche Chong-kil Revealed

By Soh Ji-young  
Staff Reporter

A presidential fact-finding commission's probe into the mysterious death of Tsche Chong-kil 28 years ago, is helping to lift the heavy mist surrounding the incident.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said yesterday that investigations revealed Tsche, who died in 1973, did not confess to being involved in a massive espionage case in Europe as reported by intelligence officials.

Tsche, a former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professor, died after falling from a rest room at the then Kore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IA) headquarters. The KCIA had issued a report saying that the 41-year-old Tsche had plunged to his death after admitting to his spying activities.

"Although Tsche had never confessed to being involved in espionage activities, the KCIA falsely announced that he had admitted to spying and then had been driven by guilt to commit suicide," said Kim Hyung-tae, who is in charge of the case at the presidential commission.

The fact-finding committee had discovered the cover-up through questioning then KCIA officials and examining Tsche's interrogation files.

"Records also showed that Tsche had been tortured by intelligence officials while being questioned," said Kim.

Although strong suspicions were constantly raised regarding the exact cause of Tsche's death, this is the first time some light has been shed on the case.

The KCIA had turned down requests to disclose the scene of his death or to conduct an autopsy after Tsche died, height-



The photo shows a happy moment for Tsche Chong-kil, left, and his family before he was implicated in an espionage case, which led to his mysterious death in 1973. Korea Times File

ening the possibility that investigators may have tortured him to death.

The new discovery shows that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professor was just another victim to the Park Chung-hee regime's master plan to oppress the nation's democracy movement that was rising up against the authoritative government.

But the commission fell short of concluding that his death resulted from torture, citing that further investigation need to be carried out.

"Although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sche indeed died from torture, we need to conduct more probes to know for sure," said Kim.

He said the commission could not rule out other explanations, such as the possibility of Tsche taking his own life due to unbearable physical and mental pressure during interrogation.

Tsche was suspected of being a spy for North Korea after he

was discovered to have made a trip to East Berlin during his years studying in Germany. There was also the fact that one of his friends was suspected of being involved in espionage.

Tsche's case is only of the investigations launched by the commission early this year into 75 mysterious deaths and disappearances of professors, student activists, unionists, civil rights advocates and dissidents, which occurred during past military regimes.

The commission was created last October in accordance with a special act and a presidential decree.

Bereaved family members and civic groups have long claimed that several hundred dissidents, professors, students, unionists and civil rights advocates were tortured to death because of their pro-democracy activities during the rule of military governments in the 1970s and 1980s.

jysoh@koreatimes.co.kr

## 최교수 사인규명, 국정원 적극 협력해야

현대사 암흑시대의 또 한 죽음의 진실이 가려질 것인가. 의문사인사규명위원회는 28년전에 있는 최종길 서울대교수 의문사와 관련하여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발표와 달리 고인이 간첩이라고 자백하지 않았으며, 고문사실도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교수 사건이 공권력 고문치사인지 여부에 대해 위원회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발표는 대학가 반(反)유신 의거에 직면한 권력이 정권안보차원에서 기획한 만행일 가능성을 짚은 정부차원의 첫 공식확인이다. '유신정권 의문사 제1호' 진상규명 작업이 새 전기를 맞은 만큼 우리는 유관기관, 특히 중정 후신인 국정원의 각별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본다.

위원회가 6월12일 '자살아닌 타살'로 보고할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생전이든 사후든 진실이 밝혀져 정의가 이긴다는 믿음이 없다

면 이 사회는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없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성의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각 의문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유관기관과 사건관련자들이 먼저 '성의와 의무'의 함의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이 과거의 반인권 그늘을 걷어내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협력할 것을 당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건발생 15년 후의 재조사에서 역시 투신 자살로 마무리했던 검찰과 법무부 또한 '잘못된 결론'을 바로잡으려는 성의와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위원회가 6월25일 공권력 고문치사로 결론내린 박영두씨 사건의 예처럼 이미 종결처리된 사안이라는 식으로 머뭇거리는 퇴행적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

## 단서 드러난 최교수 의문사

1973년 중앙정보부(중정)에 연행됐다가 의문사한 서울대 최종길 교수가 '간첩협의를 시인했다'는 당시 발표는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인사규명위원회는 20일 "당시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중정이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시인한 뒤 자책감에 중정 건물 7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거짓 발표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아울러 당시 수사관들이 조서를 조작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최 교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 내고 영명어와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든 최 교수의 주검 사진을 공개했다.

진상규명위는 그러나 조사과정의 가혹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시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최 교수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계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상위는 최 교수의 죽음을 고문에 의한 치사, 고문을 피할 목적, 모욕적인 수사에 항의하기 위한 자살, 고문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내던졌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 교수의 죽음이 진상 규명위가 설정한 4가

지 가능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넓은 의미에서 타살이라고 할 수 있다. 설사 '최 교수가 7층 화장실 창틀에서 뛰어 내렸다'는 당시 중정의 발표가 맞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는 타살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당시 중정이라는 곳이 피의자가 자살할 수 있을 정도로 감시가 느슨했는지는 덮어 두더라도 '오죽했으면 그가 자살을 선택했겠는가'를 유추해보면 결론은 자명해 진다.

최 교수의 죽음이 직접 타살이든 간접 타살이든 그의 죽음에 얽힌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명예회복, 그리고 그 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위해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현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사회가 이를 신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최 교수와 그 가족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요, 그런 일에 동원된 말단 행위자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 교수 사건은 물론 유사한 모든 사건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일이다. 그래야 그들은 역사적인 범죄의 '가해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기관의 가증스런 범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가 20일 공개한 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의 사진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1973년 10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그의 주검을 담은 사진에는 피멍 등 고문 흔적이 역력했다. 박정희 정권의 폭압통치 아래서 현직 국립대 교수가 이 정도로 당했으니,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동자, 농민 등이 끌려가 얼마나 잔인 무도한 짓을 당했는지 익히 짐작이 간다.

유신체제의 대표적 의문사 사건의 하나인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위의 중간발표는 중앙정보부가 가공할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간첩혐의를 시인한 것처럼 사후에 조서를 조작해 간첩단 사건의 주요 관련자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규명위는 최 교수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자살, 타살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만 보아도 중앙정보부는 무고한 시민에 가혹행위

를 해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운 뒤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등 '사후 인격살인' 까지 자행한 셈이다.

이런 국가기관의 만행은 유신시대가 그야말로 민주주의 암흑기였으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있을 수 있던 일이라고 체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이 사라진 지가 제법 되는데도 이제서야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유족들의 잇따른 진상규명 요청에 따라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이기는 했지만, 간첩혐의 조작은 고사하고 가혹행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진상규명 작업이 진척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민주정권이 들어섰지만, 공안기관쪽 세력은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이제 공안기관들의 사보타주는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최 교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수많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 의문사 규명 적극 협조해야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했다는 조서는 사후 수사관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다. 또 최교수가 심하게 고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니 그가 "간첩임을 시인한 뒤 자책감에 중정 건물 7층에서 떨어져 자살했다"는 증정의 발표는 28년만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암울했던 시절이라고 하지만 국가기관이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짓을 자행했는지 전율스럽다.

진상규명위는 최교수의 직접 사인이 고문에 의한 것인지, 혹은 자살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유신 초기 반발하는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갖가지 악독한 방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한 셈이다. 솔직히 유신독재 시절 증정은 잔혹한 고문과 인격파괴 등의 방법으로 멀쩡한 사람도 간첩으로 둔갑시킨 예가 많아 그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규명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준하 선생과 최교수 건은 물론 교도소내 인권탄압에 반대하다 숨진 박영두씨 및 92년 행방불명된 노동운동가 박태순씨 등

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진실을 밝혀내거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속도로 보 접수된 84건의 의문사를 한정된 기간내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20~30년 전 사건이라 물증과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에다 관련기관과 인사들의 비협조, 규명위의 한정된 권한 때문이다.

규명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의문사와 관련된 경찰, 검찰, 군, 국정원 등이 소아적 발상에서 벗어나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규명위의 권위를 각 부처에서 인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관련인사들도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억울하게 숨진 이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증언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특히 규명위원들에게는 한시적으로나마 강제소환과 출국금지,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사권 등 실질적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소환불응이나 거짓진술에 대한 효과적 처벌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조사기간도 대폭 연장해야 한다.

김준배 선출 유력 후보들

김준배는 1980년 1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김준배는 선거 전날인 1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00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대한 서울대학교 재학생의견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내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을 사람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준배는 17일 0시 15분 경 서울특별시장 선거 개표가 끝나자마자 당선되었다. 김준배는 17일 12시 15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사를 통해, '서울을 사람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김준배는 18일 11시 30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을 갖고, 18일 12시 15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사를 통해, '서울을 사람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김준배는 19일 11시 30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을 갖고, 19일 12시 15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사를 통해, '서울을 사람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김준배는 20일 11시 30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을 갖고, 20일 12시 15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사를 통해, '서울을 사람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김준배는 1980년 1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김준배는 선거 전날인 1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00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대한 서울대학교 재학생의견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내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을 사람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준배는 17일 0시 15분 경 서울특별시장 선거 개표가 끝나자마자 당선되었다. 김준배는 17일 12시 15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사를 통해, '서울을 사람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김준배는 18일 11시 30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을 갖고, 18일 12시 15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사를 통해, '서울을 사람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김준배는 19일 11시 30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을 갖고, 19일 12시 15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사를 통해, '서울을 사람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김준배는 20일 11시 30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을 갖고, 20일 12시 15분 경 서울특별시장 취임사를 통해, '서울을 사람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김준배 사건 관련 보도

‘97년 대학생 의문사’ 조사 힘겨루기

# 현직검사 소환-불응 진상규명위-檢 대립

검찰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 최범무도 거부  
규명위 “특별법 무시하나” 동행명령장 검토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의문사 관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직 부장 검사를 소환했으나 이에 불응해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가 소환될 경우 수사 기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협조요구를 정식으로 거부해 양측이 정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의문사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97년 발생한 운동권 출신 K대 학생 김모씨(당시 27세) 가족으로부터 김씨의 사인이 실족사라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문이 많다는 진정서를 지난 12월 접수받아 조사를 벌였다.

진상규명위는 자체 조사 결과 김씨

사망 사건의 내용이 당시 검·경의 조사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검찰조사가 이틀만에 조기 종결된 것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판단, 당시 담당 검사를 소환해 사건의 축소 여부 등 실제적 진실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달 초 두차례에 걸쳐 지난 97년 당시 광주지검 공안부에서 김씨 실족사 사건을 지휘했던 정모 검사(현 Y지청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수사 당사자인 현직 검사를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측은 소환요구를 받은 정검사가 두차례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정검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양승규 위원장과 김형태 제 1차 임위원이 지난달 23일 최경원 법무부장관을 방문, 소환 협조를 공식 요청했으나 최장관은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원회측은 “지난 4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해 의문사 진상을 규명토록 했으나 정무기관들의 비협조로 성과가 없다면 역사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김대통령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토록 국가정보원과 검·경, 기무사 등 관련 기관에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측은 정검사가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학생 운동권 출신인 김씨는 지난 97년 9월 15일 밤 11시쯤 광주시 매곡동 C 아파트 13층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해 아파트 외벽 유선 방송 인입용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졌다.

강영수기자 nomad@kmb.co.kr



의문사규명위,현직검사 첫 소환통보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의문사 관련 사건 조사를 위해 현직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의문사규명위는 23일 "지난 97년 의문사한 운동권 출신 대학생 김씨(당시27세)씨의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달초 정모 검사(Y지청장)에게 2차례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가 발족한 이후 수사당사자인 현직 검사에게 소환통보하기는 처음이다.

규명위는 이에따라 양 위원장 등이 직접 최경원 법무장관을 방문, 정 검사의 소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장관은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완곡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자체 조사결과, 김씨 사망사건의 내용이 당시 검경 조사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특히 검찰조사가 이틀만에 조기 종결된 점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 당시 담당 검사를 소환해 사건의 축소여부등 실제적 진실을 밝힐 방침이었다.

양승규위원장은 "우리가 무작정 검사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수사문제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를 제시한 만큼 법무부에서 전향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끝까지 불응할 경우 동행 명령장 발부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정부기관의 비협조로 의문사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역사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정부 각 기관에 적극적 협조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에대해 "공문을 통한 정식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정식으로 거부한 적도 없다"며 "다만 이 문제는 정검사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 K대출신으로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이었던 김씨는 97년 9월 15일 오후 11시께 광주시 매곡동 모야파트 13층에 은신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파트 외벽 유선방송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sungjin@yna.co.kr

의문사규명위 출석요청  
현직검사 두차례 불응

97년 대학생 사망관련...규명위·법무부 힘겨루기 양상

현직 검사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어, 법무부와 규명위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 소환을 거부하고 있고, 규명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등 관련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강화하려 해, 양쪽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3일 "1997년 한총련 김준배 투쟁국장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한 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현 지청장)에게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번번이 응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준배(사망 당시 27살·광주대 졸업)씨는 97년 9월 15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초아파트에서 숨어 있다가 경찰의 검거 과정에서 숨졌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형사기동대원이 들이닥치자 유선방송케이블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다 추락사했다"고 발표했다. 또 검찰은 사건 직후인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검 결과 김씨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우심방 및 간 파열'로 나타나 김씨가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목숨을 잃은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명위는 김씨 사망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 의혹 등 검경

수사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 조사가 이를 만에 조기 종결된 배경 등도 집중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상 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열쇠를 쥔 담당 검사가 규명위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규명위와 법무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 소환 협조를 공식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담당 검사는 "의문사규명 특별법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개입으로 사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적단체인 한총련 투쟁국장이 문민정부 시절 사고사한 이 사건이 규명위 조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특별법상 요건이 안 되는 사건을 이유로 굳이 검사를 소환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명위는 "정부기관들의 협조가 없다면 의문사의 진상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무부의 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국가정보원과 검·경, 기무사 등 관련 기관에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 의문사규명특, 현직검사 소환통보

## 97년 대학생 실족사 관련

### 본인불응-법무부도 협조거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23일 "97년 의문사한 운동권 출신 대학생 김모씨(당시 27세)의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달 초 정모 검사(현재 지청장)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를 발부했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가 발족한 이후 현직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규명위는 최근 양 위원장 등이 직

접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을 찾아가 정 검사 소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 장관은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자체 조사결과 김씨 사망사건의 내용이 당시 검경 조사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특히 검찰 조사가 이를 만에 조기 종결된 점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 담당 검사를 소환해 사건의 축소 여부 등 실제적 진실을 밝힐 방침이었다.

양 위원장은 "무작정 검사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수사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소환하겠다는 것"이라며 "끝까지 불응할 경우 동행 명령장 발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이던 전남 K대 출신의 김씨는 97년 9월15일 오후 11시경 광주 대곡동 모 아파트 13층에 은신해 있던 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유선방송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현직검사 첫 소환통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의문사 관련 사건 조사를 위해 현직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의문사규명위는 23일 "지난 97년 의문사한 대학생 김모(당시 27세)씨의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달 초 정모 검사(Y지청장)에게 2차례 출석요구를 발부했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가 발족한 이후 수사당사자인 현직 검사에게 소환통보하기는 처음이다.

규명위는 자체 조사결과 김씨 사망사건의 내용이 당시 검경 조사내용과 차이가 나고 특히 검찰조사가 이틀만에 종결된 점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 당시 담당 검사를 소환해 사건의 축소 여부 등 진실을 밝힐 방침이었다.

양승규 위원장은 "무작정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수사문제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를 제시한 만큼 응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응할 경우 동행 명령장 발부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 K대 출신으로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이었던 김씨는 97년 9월15일 오후 11시경 광주시 대곡동 모아파트 13층에 은신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파트 외벽 유선방송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w.com

# 현직검사 의문사규명위 소환불응

## 97년 대학생 의문사 관련 ...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23일 "의문사 관련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달 초 현직 검사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는 97년 의문사한 운동권 출신 대학생 김 모(당시 27세)씨의 사건이 당시 검찰과 경찰의 조사내용과 차이가 많은 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직 검사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규명위가 발족한 이후 수사당사자인 현직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규명위는 이에 따라 양 위원장 등이 직접 최경원 법무장관을 방문, 정 검사의 소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 장관은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독립성훼손을 이유로 내세워 소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규명위는 이번 기회에 실질적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승규 위원장은 "무작정 검사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수사문제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를 제시한 만큼 법무부에서 전향적으로 응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문을 통한 정식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정식으로 거부한 적도 없다"며 "다만 이 문제는 정 검사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이었던 김씨는 97년 9월 15일 오후11시경 광주시 대곡동 모아파트 13층에 은신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파트 외벽 유선방송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